



특별기고

신 명 김형준 노지연
유성애 서정숙

토론회 시상중계

4·7 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좌담회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성 후보

초대석

한정애 정영애

경제학 교실

이혜훈

정치학 교실

황인자 김혜성

함께 걷는 길

김주영 이종배

정치여성 칼럼

남인순 신의진 백혜련
임오경 양성희 강한옥

여성 인물 열전

주양자 전 국회의원

여성 정치인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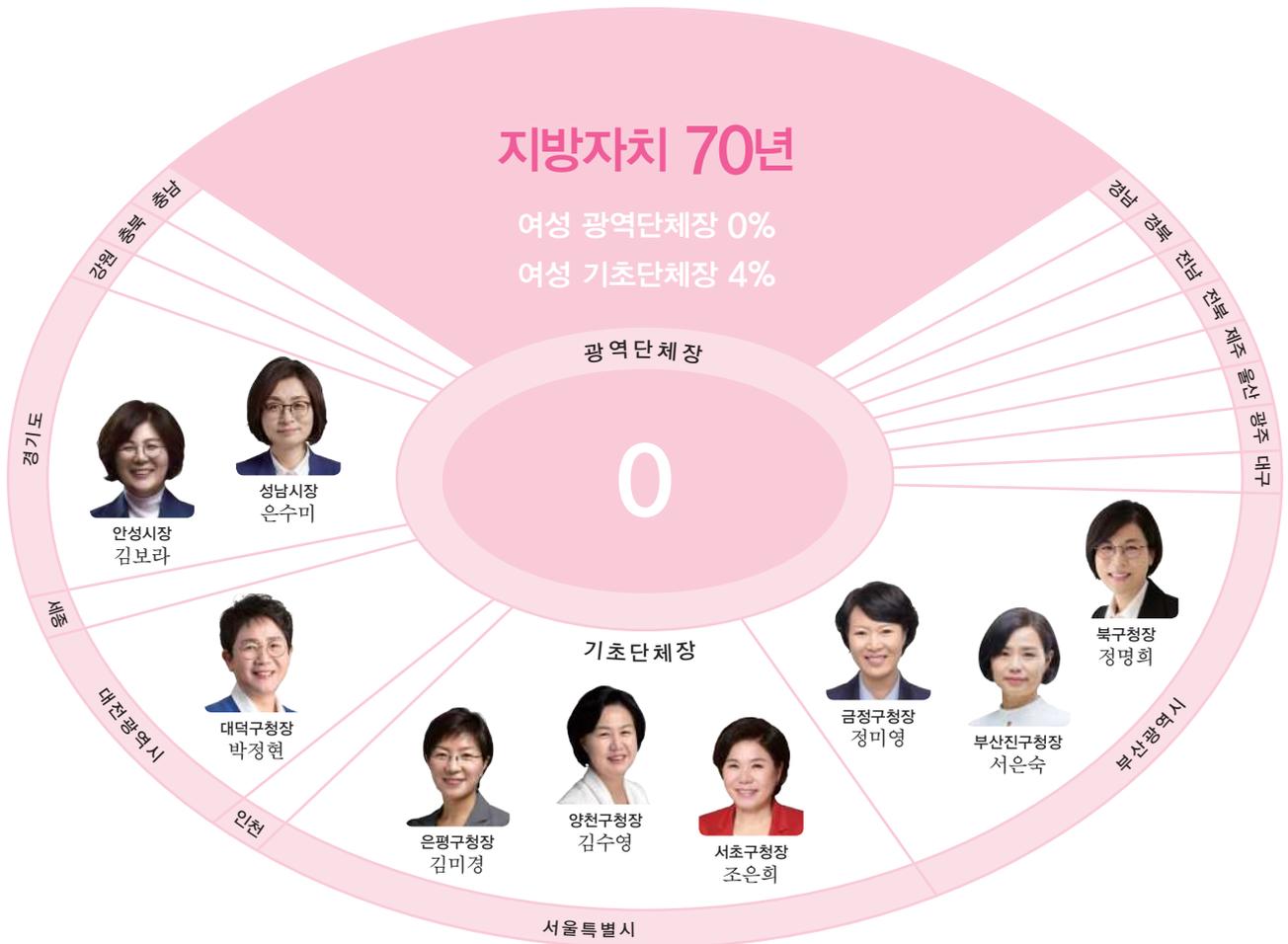
이응호

보고싶은 얼굴

서혜석 이계경 최순영

부록

제21대 여성 국회의원 의결 법안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 당선자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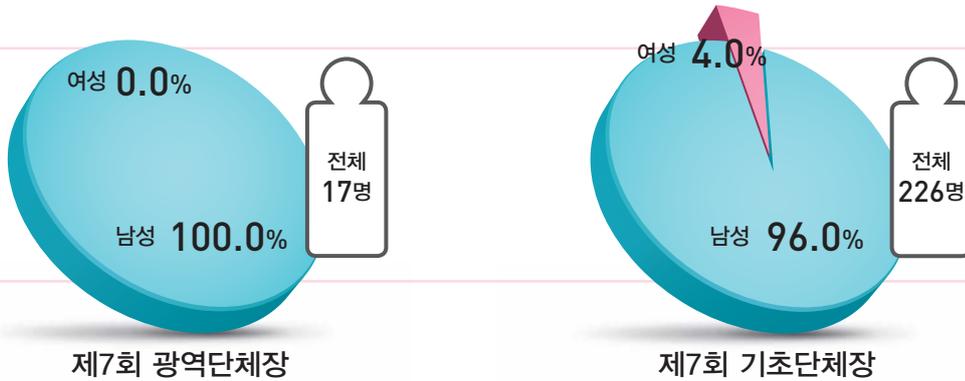
%
25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1991년 부활되어 올해 30년을 맞이하면서 이후 7회에 이르기까지 여성의원 비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특히, 광역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여성할당제를 도입한 2002년(제3회) 선거에서 여성 당선율이 높아졌고, 2006년(제4회) 기초의회의원까지 여성할당제가 적용된 선거에서는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여성의원이 전체 의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세계 각국의 수준에 비해 아직도 열악한 수준이다. 여성 당선자가 과거보다 늘었다고는 하나 전국 평균 30%에 미치지 못해 여성의 과소 대표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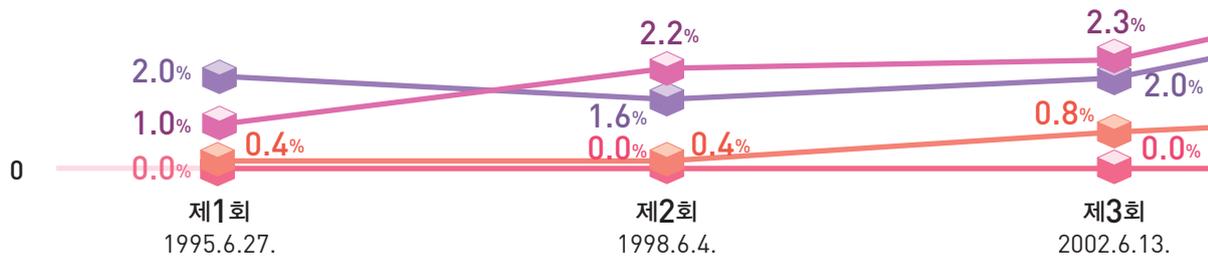
2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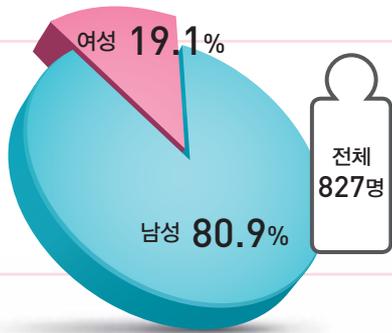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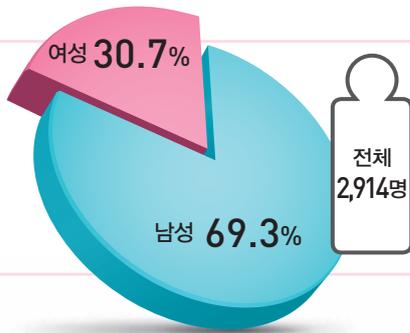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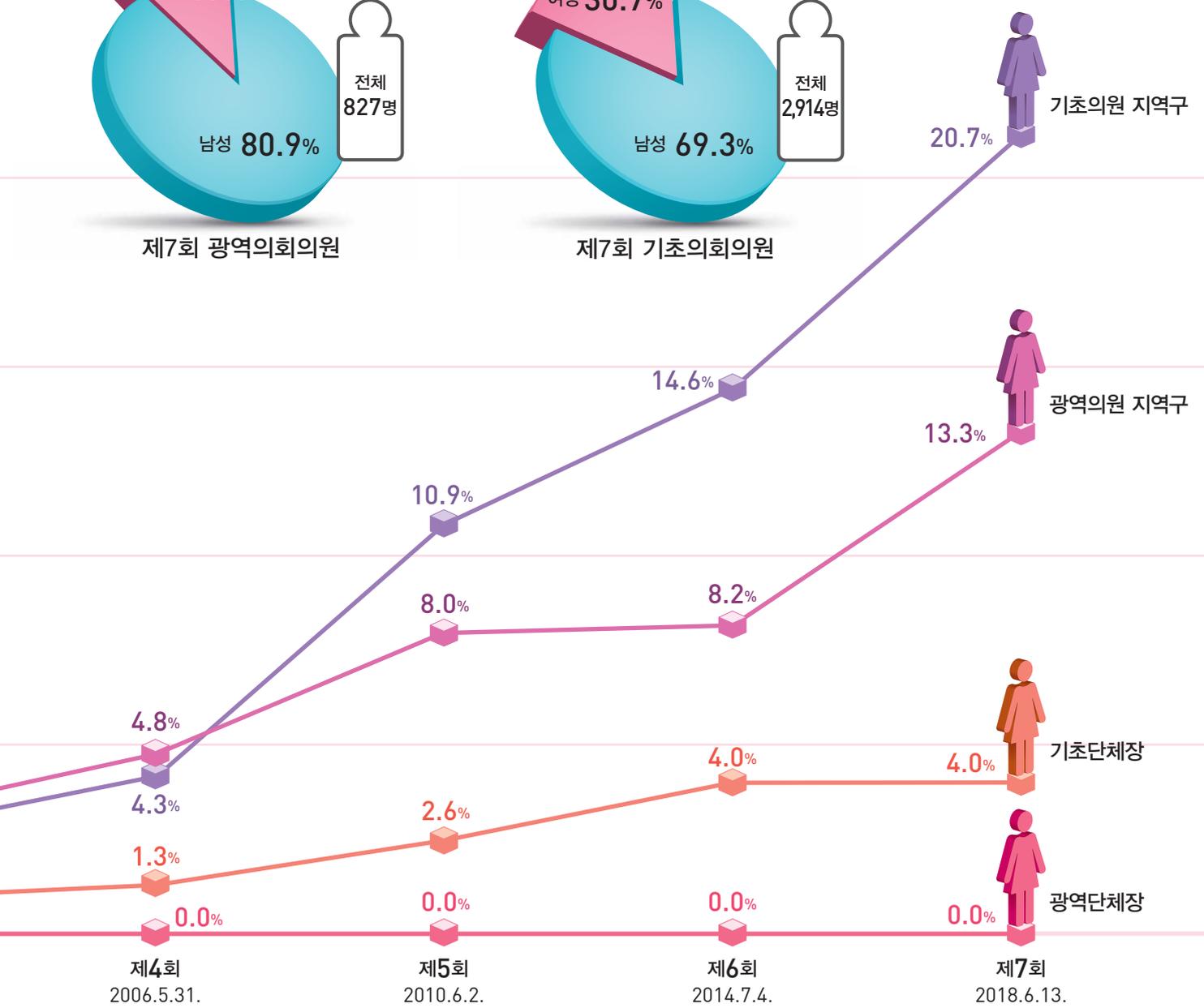
0



제7회 광역의회의원



제7회 기초의회의원



Contents

VOL. 12 / 2021

특집

6 4·7 보궐선거를 딛고 서다

여성이 의무를 다하자 | 신 명
젠더 이슈 선점하라 | 김형준
사다리를 놓는 청년정책이 핵심 | 노지연
'이여자 이남자'의 선택이 남긴 숙제 | 유성애
여성이 바꾸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 서정숙

12 토론회 지상중계

4·7 보궐선거 평가와 6·1 선거 대책 토론회

22 좌담회

소수정당 선택은 새로운 진보 원한다는 강력한 신호



여성의정 365

26 초대석

환경부 장관 한정애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30 경제학 교실

디지털에서 탈세계화까지 | 이해훈

32 정치학 교실

『세상을 바꾼 여성 정치인들』 제4호 발간 | 황인자
『정치! 이것부터다』, 『출발! 함께 합시다』 | 김혜성

36 졸업생 한마디

'남다른 열정과 패기'로 석사 땀어오

정치여정

40 함께 걷는 길

돌봄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미래다 | 김주영
여성 고용과 미래세대 돌봄은 국가 경쟁력이다 | 이종배

44 칼럼

스토킹범죄처벌법 22년 만에 제정 | 남인순
정인이의 죽음은 또 생길 수 있다 | 신의진
아동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출발점 | 백혜련
유리천장 깨기와 인권 회복은 같다 | 임오경
여성가족부 20년 | 양성희
첫 흑인여성 WTO 사무총장의 도전 | 이윤정
『여성의원 증가에 따른 의회 생산성 변화연구』 | 강한옥





문화산책

- 58 소나무 만송정 | 정의화 전 국회의장
책 이야기 보부아르, 여성의 탄생 | 최현지
영화 미나리 | 강푸름

인물로 보는 여성

- 66 여성 인물 열전 | 함영이
주양자 전 국회의원
여성 정치인 가족 | 이응호(양금희 제21대 국회의원 아들)
보고싶은 얼굴
서혜석 제17대 국회의원
이계경 제17대 국회의원
최순영 제17대 국회의원

여성 정치 소식

- 72 여성의정은
정부는
지방은

부록

- 79 2020~2021년 전반기
여성 국회의원 의결 법안



표지 이야기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로 여성 광역단체장은 없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궐선거 포함)를 통해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9명의 여성 기초단체장이 선출되었다.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정
발행일 2021년 5월 10일
발행인 상임대표 신 명
편집위원 권은희(위원장), 신 명, 이경숙, 김혜성, 이두아, 민병주, 김삼화, 김선임, 이미래
편집팀 김단비, 남혜경
주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42호
전화번호 (02) 786-5050 / 788-3341~2
팩스 (02) 784-0717
이메일 kwpn2013@daum.net
등록번호 영등포 바00128
간행물 허가번호 ISSN 2466-0884
홈페이지 www.kwpn.co.kr
출판 여성의정
디자인·제작 ㈜씨마스커뮤니케이션
ISSN 2466-0884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글은 필자의 견해이므로 한국여성의정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2년 여성 정치를 향하여

여성이 의무를 다하자

4·7 보궐선거가 끝났다. 이번 보궐선거는 단체장의 성추문과 관련된 만큼 여성 후보자와 여성 유권자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됐다. 어느 때보다 많은 여성 예비 후보자의 등장으로 정부 수립 이후 최초 여성 단체장을 기대했지만, 오랜 벽을 넘지 못하고 다시 '이남자(20대 남자)' 선거라는 신조어를 남기는 결과만 만들고 말았다.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기업도 '동등참여의 힘'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정치 부문에서 '할당제'를 넘어 '동등참여'를 위한 헌법을 개정하는 등 동행의 길을 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제자리걸음을 하는 실정이다.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정치관련 3법 개정안」의 통과는 물론 남녀동등 참여를 담은 헌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2년은 그야말로 '선거의 해'다.

3·9 대통령 선거에 이어,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는 어느 한 성(性)에 편중되지 않은 동등한 참여로 참된 민주주의를 기대한다.



신명

-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
- 제17대 국회의원



같등을 넘어 함께 사는 사회를

이번 서울 단체장 선거의 여성 후보자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김옥선·황산성(제1회), 강금실(제4회), 한명숙(제5회), 나경원(제5회 보선)을 이은 박영선이었다. 언제 여성 시장이 탄생할 것인지 많은 관심을 모았고 이번에는 여여(女女) 경쟁으로 여성 시장의 탄생을 기대할 만한 선거였다. 결과는 '이남자'의 남녀같등이라는 편견만 드러났을 뿐 여성의 대표성과 안전을 비롯한 의제는 제대로 담론장으로 오르지도 못하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과제만 남았다.

그러나 많은 여성 예비후보자가 있었다. 서울에서는 후보자 12명 중 여성이 5명으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었다. 세계는 유리천장이 무너지면서 여성 단체장이 많아지고 있다. 미국의 주(州)정부 여성 지사가 18%, 부지사가 34.9%이고, 100대 도시 중 27%가 여성 시장이다. 유럽에서도 파리, 오슬로, 로마, 스톡홀름, 암스테르담 등 각국의 주요 도시에 여성 시장이 늘어나고 있다. 파리의 경우는 자치구 17개 중 7곳이 여성이다. 이제 불평등, 젠더 같등을 넘어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하여 미래를 설계하자.

여성 정치 참여는 여성의 의무다

2022년 6월 1일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있다. 22년은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 지 70년,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그러나 여성 광역단체장은 없고, 기초단체장은 9명(4%)에 불과하다. 광역의원 19.4%, 기초의원은 30.8%로 겨우 임계치를 넘기기는 했으나, 아직도

여성의원이 1명인 기초의회가 41개나 있다. 또한 비례대표를 제외하면 지역구 여성의원은 광역의원 13.3%, 기초의원 20.7%로 70년 지방정치가 풀어야 할 과제다

한국여성의정에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유권자는 남녀 구분 없이 '일 잘하는 사람'을 원한다고 답했다. 여성 유권자 수는 서울 50.8%, 부산 50.4% 등으로 이미 50%를 넘어선 지 오래다. 국민 행복을 위한 여성 안전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돌봄과 교육, 사회안전망 개편 등 변화된 일상에 따른 의제는 여성이 해야 할 일이고,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다. 이같이 '해야 할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할 이유이자 여성의 의무다

동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헌법 개정 해야

정당은 선거 때마다 공천 시기가 다가오면 '사람이 없다', '여성은 당선 어렵다', '아직 여성은...'이라고 하는 옛 이야기에서 깨어나야 한다. 여성 진출에 걸림돌이 없는지 정당 규정을 다시 살피고 다듬어 2022년에는 보다 많은 단체장을 포함한 여성, 특히 청년 여성 공천으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제21대 국회는 동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헌법을 개정(제1조제3항 신설)하고, 지금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련 3법」 개정으로 정치계가 앞장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동등한 참여를 끌어내는, 동수 민주주의의 실현을 기대한다. 📢

내년 6·1 지방선거는 지금이 시작 젠더 이슈 선점하라



김형준

- 명지대학교 교수
- 한국선거학회 회장(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전례 없는 압승을 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180석(60%)을 몰아줬던 민심이 불과 1년 만에 돌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심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엠브레인 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이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월 12~14일)에 따르면, 민주당이 참패한 요인으로 가장 많은 43%가 ‘주택, 부동산 등 정책 능력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의 문제’(18%), ‘야당과 협치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15%), ‘전직 시장의 성추문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 부재’(10%) 순이었다.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불안감이 정권심판론에 불을 당긴 면도 있다. 실제로 한국리서치가 보궐선거 직전에 실시한 조사(4월 2~5일) 결과, 우리나라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55%)는 비율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34%)보다 21%p 더 많았다. 20대의 경우 무려 40%p(62% 대 22%) 차이였다.

2030 표심, 스윙 보터로 선거 승패 결정

이번 보궐선거 결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동안 현 정부를 지지했던 ‘2030 세대’의 반란이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대와 30대에서 오세훈 후보가 각각 55.3%와 56.5%, 부산 시장에선 박형준 후보가 각각 51.0%와 50.7%를 얻었다. 또 다른 특징은 20대 남성(이대남)과 20대 여성(이대녀)의 투표 행태가 크게 차이를 보인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이대남의 72.5%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지만 박영선 후보 지지는 22.2%에 불과했다. 반면 이대녀의 44.0%가 박영선 후보에게 표를 던져 오 후보 지지율(40.9%)을 웃돌았다.

이런 현상에 한편에서는 ‘젠더 갈등 프레임’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지극히 잘못된 점

근이다. 이대남의 표심은 현 정부의 여성 편중 정책과 페미니즘에 반발한 것이 아니라 현 집권 세력의 무능과, 불공정, 그리고 내로남불 위선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에게 몰표를 준 것이다. 이대녀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직후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90%에 육박했다. 하지만 지금은 반 토막이 났다. 그만큼 이대녀들도 현 정부에 화가 났고, 정부의 젠더 이슈 무능에 등을 돌린 것이다.

다만, 이대남과 이대녀는 주관적 이념 성향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갤럽 3월 통합 조사(23, 25일)에 따르면, 이대남의 주관적 이념 성향은 ‘진보 24%, 중도 32%, 보수 28%’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이대남의 경우 17%인 반면, 이대녀는 7%에 불과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방송 출구조사에서 이대녀는 양성평등이나 차별금지 공약을 전면에서 내세운 제3정당 후보 지지율이 15.1%로 나타났다.

분명 내년 대선에서도 ‘2030세대의 표심’이 선거 승패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유권자 지형이 2030세대·4050세대·6070세대로 재편되었기 때문이다. 2030세대는 현 정부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40대와는 달리 특정 이념과 정당에 예속되지 않고 상황과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스윙 보터(swing voter)로 변했다. 따라서 내년 대선에서 이들 세대가 야당에 이번처럼 몰표를 줄지는 알 수 없다. 내년 대선에서 40대 X세대와 50대 86세대의 표심은 진영의 논리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20대 Z세대와 30대 밀레니얼세대는 공정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해 줄 것으로 보인다.

반성하고 혁신하는 세력이 승리한다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자신들이 시대정신으로 생각하는 젠더 가치에 더 공감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것이다.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은 이대남 표심 잡기에 혈안이 된 모양새다. 군가산점 부활, 모병제 전환 및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성평등의 본질을 망각하고 젠더 갈등을 이용한 ‘알파한 포퓰리즘 정치’에 불과하다. 결국 집권 여당에 대한 여심의 등을 돌리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20대 여성의 투표율이 20대 남성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에 따르면 20대 전반 남성과 20대 후반 남성의 투표율은 각각 54.3%와 51.3%였다. 반면, 20대 전반 여성과 20대 후반 여성의 투표율은 각각 62.6%와 62.4%였다. 단언컨대, 내년 대선에서 시대정신에 입각한 젠더 이슈를 선점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프레임으로 만드는 세력이 승리할 것이다.

내년 3월 대선 결과는 새 정부 출범(2022. 5. 10.)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치러질 6·1 지방선거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1998년 6·4 지방선거 때와 비슷한 상황이 될지 모른다. 당시 선거는 1997년 12월 대선에서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새 정부(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째 되던 날에 치러져 여당이 압승했다. 1995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야당인 한나라당은 정당 득표율이 33.6%p 떨어진 반면, 집권당이 된 새정치국민회의는 35.9%p 올랐다.

내년 6·1 지방선거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자만하고 분열하는 세력은 패배하고, 참회하고 혁신하는 세력은 승리한다. 1998년 지방선거 때와는 달리 선거 문화와 국민의 의식이 많이 달라졌다. 실력 있는 여성이 총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 국민은 ‘준비된 여성’에게 반드시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 줄 것이다. 정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잘 준비하는 여성 후보에게는 기회는 온다. 여야 정당은 능력만을 보고 여성 후보를 대거 공천해 여성의 실질적인 대표성 제고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

2000년대생이 온다 사다리를 놓는 청년정책이 핵심



노지연

· 강원대학교·가톨릭대학교 강사

2021년 3월 교정은, 2002년생 신입생으로 가득 찼지만 캠퍼스에 낭만이 사라진 지는 오래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태어난 학생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태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 명문 대학을 졸업해도, 고소득 직업을 갖게 되어도 자신의 경제적 '출신'을 벗어나긴 어려워졌다. 한편 이들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 논란에 따른 광우병 파동을 겪은 광장세대이자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촛불세대이기도 하다. 10년에 한 번꼴로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놓는 듯한 경험을 한 것이다.

민주화라는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던 시대도, 취업난으로 정치에 관심이 없던 시대도 지나가고, 이제 취업난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갖는 시대가 되었다. 입시비리, 취업비리 등 각종 불공정한 사례는 학생들로 하여금 정치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게 이끌었다. 학생들에게 현안은 곧 정치가 되었다.

세대균열인가?

4·7 보궐선거 결과 큰 주목을 받았던 현상은 20대의 표심이었다. 통상적으로 젊은 층은 진보당을 지지하고 기성세대가 될수록 보수당을 지지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방송3사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성별을 불문하고 40대 남녀가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가장 크게 지지하였다. 한편 20대 남성은 전 연령대를 통틀어 국민의힘 오세훈에게 72.5%라는 가장 큰 지지를 보여주었다. 20대 여성의 15.1%가 기타 정당에 투표하였다. 새로운 세대균열이 생겨난 것일까?

한국의 경우 지역균열에 가리워져 세대균열이나 성별균형 같은 사회균열(social cleavage)이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선거의 균열 구조 중 하나로 세대와 성별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2004년 제17대 총선 이래로, 지역 기반 투표가 강한 지역일수록 세대균열이 중요한 변수로 교차 적용되었다.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을 묻는 토론 수업 시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노인의 투표권 제한이다.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지만, 정치권에서 내놓은 정책과 사업에 청년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라떼는 말이야(나 때는 말이야)’는 더 이상 청년에게 통하지 않는다.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시절에는 충고였겠지만, 희망도 미래도 없는 세대에게는 참견일 뿐이다. 태어나서 경험한 것이 저성장뿐인 학생들에게 경제는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이 되어버렸다.

성별균열인가?

2021년 보궐선거가 끝난 후 20대 표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성별균열이다. 특히 ‘이대남’, ‘이대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면서 20대 남녀의 젠더를 둘러싼 논쟁이 화두에 올랐다. 페미니즘을 둘러싼 20대 여성들의 옹호론과 안티 페미니즘으로 20대 남성이 집결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성별균열인가?

아니다. 2018년 대통령 지지도와 비교해보면 2021년 보궐선거는 20대 남녀 모두 약 20%p 하락한 결과물일 뿐이다. 또한 역대 가장 많은 페미니스트 후보가 등장한 선거이기도 하나, 20대 여성이 이들에게 던진 표는 2% 남짓이다. 이 정도의 수치로 젠더가 20대에 새로운 균열을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오히려 주목해보아야 하는 점은 이들이 공통으로 가리고 있는 부분이다. 20대 유권자가 말하는 것은 ‘공정과 평등’이다. 20대 여성이 고용과 임금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 20대 남성이 취업난에 군대가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존에 지장이 있다는 반증일 뿐이다. 이 두 가지는 대립항에 있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이것이 20대 여성은 페미니즘으로, 그리고 20대 남성은 역차별과 박탈감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문제, 취업 비리 등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불공정·불평등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에게 미래와 희

망을 논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주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20대의 투표결과를 보고 배워야 하는 점은 청년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 안에서 구태의연한 성별분쟁만 조장하여 20대 내에 있는 다양성은 존중받지 못했다. 노인과 청년이 상생해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듯이, 남성과 여성 역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청년을 위한 정책? 청년을 대하는 정책?

월세 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데이터 바우처 지원, 교통비 지원 등 4·7 보궐선거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졌다. 그러나 정작 정책 대상인 20대는 냉담했다. 월세를 지원해줘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바우처가 제공돼도, 교통비를 지원해줘도, 취업이 되지 않는 한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쯤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미봉책은 더 이상 청년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보궐선거에서 나온 청년정책은 현재 정치권이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주어지는 혜택, 청년 취업사관학교 등은, 마치 청년실업이 이들의 가치관과 태도 문제에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보인다. 제2·제3 외국어 등 수많은 자격증을 지니고 있는 취업준비생에게 왜 취업을 위한 교육이 더 필요한지 그리고 왜 청년들은 대기업에 열광하는지 묻지 않는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과 가치관이 지금의 청년문제를 만들었다는 반성은 없다.

청년정책이 다른 정책과 가장 달라야 할 부분은 표적이 명확한 정책(targeted policy)이라는 점, 그리고 그 표적은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를 밝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이 원하는 청년정책은 일시 혜택도 차별 특혜도 아니다. 사라진 사다리를 다시 놓아, 미래를 설계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장기계획일 뿐이다. 🌸

4·7 보궐선거 평가와 6·1 선거 대책 토론회

Change! 2022



한국여성의정은 지난 4월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4·7 보궐선거 평가와 6·1 선거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4·7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성찰하고 그 부족함과 아쉬움을 딛고 서서, 내년의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성정치의 단단한 발걸음을 다시 내딛자는 '2022 남녀동수'의 비전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사회 김혜성 한국여성의정 사무총장, 제18대 국회의원
좌장 유승희 제17, 19, 20대 국회의원
발제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박명호 동국대학교 교수
토론 이수진 제21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숙향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
이지원 여성외교 공동대표
허 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은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권수현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
이영순 진울산 동구청장, 제17대 국회의원
홍진옥 충북 충주시의원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제약으로 출입을 제한해야 했을 정도로 여성 정치인과 여성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좌장은 유승희 전 국회의원이 맡아 간결하고 속도감 있게 발제와 토론을 이끌어나갔다. 발제에는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박명호 동국대학교 교수가 나섰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수진 국회의원, 허 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등 12명이 정당과 여성시민단체의 역할과 과제를 전달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신 명 한국여성정책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최초의 광역단체장을 기대했는데 허탈하고 안타깝다. 여성의제가 제대로 이슈화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젠더 이슈가 우리 정치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어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을 체감한다. 여성 유권자의 표심을 어떻게 정치의 변화요인으로 연결시킬지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희망을 덧붙였다.

“이번 선거결과를 놓고 보니 이 토론회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환영사를 시작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유경 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남녀동수로 나아가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바쁜 일정으로 불참해 축하의 꽃다발과 서면 축사로 대신했다. “여성의 정치참여 제고는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정치참여 관련 법안 논의를 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겠다. 각 정당에서도 여성 예비후보 발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신 명



문유경

젊은 유권자가 원하는 새로운 진보, 김은경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대가 바뀌어 진보의 개념이 바뀌었다. 젊은 유권자가 원하는 진보를 재점검할 시기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20대 유권자의 투표행태가 큰 관심을 모았다. 20대 남성의 75%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다. 반면 20대 여성 유권자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대 남성과 함께 박영선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지만, 15%의 유권자가 페미니스트를 표방하는 소수정당의 후보를 선택해 그들의 정치적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을 분석한 김 연구위원은 “거대 양당 후보가 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성비위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더이상 진보정당이 민주화운동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노동운동과 등치될 수 없다. 여성공약은 진보정당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다. 2022년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표심을 책임있게 반영해야 한다.”



유승희

청년 여성의 정치의사를 결집시킨 소수정당, 김은주

이번 선거를 ‘20대 청년 유권자의 봉기’라고 선언한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20대 여성은 소수정당에 대한 소신투표로 그들의 저항을 보여주었다.”며 그들의 선택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청년 여성의 선택은 다른 진보를 향한 전진이며, 세대 정치를 가로지르는 젠

더 정치이다. 사표가 될 줄 알면서도 차악이 아닌 소신투표를 보여준 그들의 태도는 권력형 성범죄나 스토킹범죄, 채용불평등 등 여성 이슈에 미온적인 정치권에 대한 경고이다. 이들에겐 성평등 의제를 가지고 나온 4명의 여성후보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었다. 소수정당의 여성 후보는 20대 여성의 정치 의사를 결집시키는 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

김 소장은 거리의 정치에서 제도권 정치로 옮겨온 소수정당의 정치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과제를 제시했다.

“소수정당이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선거연대를 구축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하며 지역사회 단체활동을 기반으로 한 정치단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남녀의 동등한 대표성 확립을 위한 동수정치 운동도 필요하다.”

여성 유권자가 여성 후보를 지지하는가, 박명호

동국대학교 박명호 교수는 “여성 정치인에 대한 태도가 여성 후보를 지지하는 결정 요인은 아니다. 정당 일체감과 선거환경이 중요하다. 미디어의 의제 설정도 큰 영향을 미친다. 결국 유권자가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여성 후보와 연결시키고 이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제안하면서 “여성의 의회 진입을 가로막는 기존 정당의 선거제도를 바꾸는 제도 차원의 처방도 필요하다.”고 했다.

몇몇 연구조사의 결과에 따라 여성이 여성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은 남성보다 높지만 결과로 볼 때 반드시 표심으로 그 인과관계가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박 교수의 지적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여성 정책이 곧바로 삶의 이해관계로 이어진다고 볼 때 여성 유권자의 선택이 여성 후보로 이어지는 당위성이 없다는 뜻은, 여성 후보가 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약이나 정책 결정을 우선으로 한다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정당의 역할, 여성계의 과제와 대책, 여성단체장의 어제와 오늘, 여성정치 관련 법제도 개선, 6·1 선거 대비 과제 등으로 주제를 나눠 활발하고 의미 있는 제안과 토론이 있었다.

정당,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는 4·7 선거였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당의 부족함을 반성하는 과제를 주는 선거였다. 청년 여성의 여성 정치 의지와, 남녀의 다른 표심을 귀담아 듣겠다.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유권자에게 다가가지 못했다고 느낀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여러 여성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이슈로 만들도록 애쓰겠다. 여성의 정치참여와 성평등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김은경



김은주



박명호

김숙향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은 “승리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특히 20·30대 청년 여성의 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여성 후보 공천이 힘들다.”고 밝힌 그는 정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언급했다.

“성별 보수성을 벗어난 여성 후보 공천과 당헌 당규를 통해 여성의 정당정치 참여를 책임지는 정치를 해야 한다. 이번 보궐선거의 당내 경쟁에도 여성 후보가 약진했다. 현장 맞춤형 인재 발굴과 교육프로그램, 여성의 자유로운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해 여성 정당 내 양성평등 의식에 앞장서도록 하겠다.”



이수진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젠더 이슈가 기반한 이번 선거에 뼈아픈 성찰과 함께 불출마를 결정했다.”는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피해자에 대한 연대, 성평등 조직문화 형성, 차별과 불평등 해소에 대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사회소수자의 선택이 쉽지 않았으나, 변화의 가능성에 투표한 유권자가 존재하므로 다시 희망과 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6·1 지방선거에는 반드시 후보를 내겠다는 배 부대표는 “여성 후보 발굴과 역량 강화에 집중해서 준비하고 선거비용 지원, 조직화 등으로 지역정치의 가능성을 높ی겠다.”고 다짐했다.



김숙향

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4·7 선거에서 여성의 당 김진아 후보가 전체 득표 순위 4위를 기록한 것은 20·30대 여성이 정치의 주체로서 거두는 증거이다. 여성의 당이 거대 양당 정치구도에서 여성 유권자의 요구를 집중 부각하여 선거의 ‘변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자평했다.

여성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신생이슈 정당이자 시민주도형 정당을 동시에 표방하는 여성의당은, 급진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를 계속하여 새로운 시스템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혁신하고 국민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시민주도형 정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배복주

여성계, 정파 초월한 연대와 협조가 절실

첫 세션이 정당의 입장에서 이번 선거를 평가하고 성찰했다면 두 번째 세션인 여성계의 토론자는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 정치인의 확대를 위한 과제와 대안을 내놓았다.

허 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공직선거법 제 47조제5항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묶어 여성 할당을 규정하고 있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한계를 주고 있는 요소로 각 정당이 여성 후보를 공천하더라도 시·도 광역의회보다는 구·시·군 기초의회에 공천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여성 할당을 각각의 선거로



이지원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 47조제4항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 여성의원 추천 30%의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은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은 특히 정당을 초월한 여성계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선거과정을 보면 성별의 심각한 대립구조를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 여성계가 나서서 화합과 공존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유권자의 40% 이상이 여성단체 활동을 하는 여성 후보가 인지에 도움이 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 여성시민단체가 정치적 중립으로 여성 유권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가교가 되어야 한다.”

유권자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대안정치는 없었다는 **김은희 전여세연 대표** 역시 4·7 선거를 넘어 내년 선거를 바라보면서 제도개선의 과제를 강조했다.

“3가지 방향의 변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광역 기초단체장 후보 여성 추천 확대, 여성 신진세력이 돈이 없어 선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선거에서의 젠더 폭력 철폐에 대한 대응이다.” 2022년은 단지 ‘선거의 해’에 그치지 않고, ‘젠더 갈등’이나 ‘젠더 전쟁’으로 도구화하지 말고 제대로 젠더 정치를 펼치는 ‘정치적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허 명

권수현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유권자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여 여성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당에서 무슨 고민을 할 것인가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선거의 원인이 된 권력형 성폭력의 폭로 과정에서 문제가 된, 여성단체 출신 정치인과 여성단체의 관계 맺기 방식에 대해 성찰하자.”고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

“기존과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정당 내에서도 여성단체와 어떤 방식으로 연대할 것인지 고민을 나누시기 바란다.”며 어떻게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주문했다.



이은주

대표성 확대 위한 실천 지침 제안

여성의 대표성 현황과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영순 전 국회의원과 홍진옥 충주시의원은 한국과 정치선진국의 여성정치 대표성을 비교하며 대표성 확대를 위한 실천 지침을 제안했다.

이영순 전 국회의원

“남녀동수법을 제정하여 여성에게 50% 할당 추천하는 멕시코처럼 우리도 나서보



김은희

자. 국회의 비례의원 비중이 낮아서 50% 할당제를 해도 여성의 대표성 확대에 한계가 있다.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 여성 후보 공천에 국고보조금을 얹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여성후보를 내지 않으면 삭감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

홍진욱 충주시의원

“중앙이든 지방이든 대선 여성 의원이 많지 않다. 여성정치 참여확대와 경력 지속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에서는 여성 인재발굴과 육성뿐 아니라 여성 정치인에게 공천과 선거과정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지원해줘야 한다. 제도에 진입한 여성 정치인이 경력을 지속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왜 대선이 아니고 지방선거인가? 대선에서부터 여성정치를 위한 아젠다를 준비해야 한다.” 고 질문을 던지며 토론을 시작한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좀 더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중시하는 기개 있는 여성 정치인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4·7 선거를 보면 여성 청년은 표가 나뉘어졌지만 남성은 집결했다. 2030세대 남녀는 젠더 문제에 관해 차별과 역차별의 갈등을 겪는다. 젊은 세대 내부의 젠더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면서 상생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여성과 청년을 같이 다루야 한다. 여성과 청년을 따로 다루면 더 갈등이 생긴다. 소통하고 들어줘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 교수의 젠더 갈등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반론과 함께 뜨거운 문답이 이어졌다.

권수현 토론자는 “20대 청년에게는 젠더 갈등보다 공통의 문제가 더 크다. 정치권이 20대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젠더의 갈등으로 치환하고 있다. 20대 남녀를 갈등의 카테고리로 묶는 담론은 후진적이다.” 며 남녀갈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참석자들은 “여성단체의 연대를 다시 점검해야 할 때이다.” “여성이라는 차별성으로 이제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 “국회에 들어가 있는 여성의원인 힘을 모아 발의한 선거 관련 개정법부터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등으로 4·7 선거의 실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신 명 상임대표는 “오늘 토론을 잘 마련했다.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을 잘 정리해서 각 정당에 전달하겠다.”며 여성단체와 정당별로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끝맺음을 했다. 🍷



권수현



이영순



홍진욱



조진만

성폭력 의제는 실종 '이여자 이남자'의 선택이 남긴 숙제



유성애

· 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

'이여자'의 15.1%와 '이남자'의 72.5%.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 투표결과 중 가장 눈에 띄는 숫자이다.

방송 3사(KBS·MBC·SBS)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이남자)은 전체의 '72.5%', 10명 중 7명꼴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했다. 전 연령·성별 그룹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같은 조사에서 20대 여성(이여자)은 '15.1%', 전 연령·성별 중 가장 높은 수치의 '기타 정당 후보' 투표를 보였다. 20대 여성은 오세훈 후보(40.9%)보다는 박영선 민주당 후보(44%)를 더 지지했으나, 다른 소수정당 후보도 포기하지 않았다. 15.1%는 다른 그룹의 비율인 0.4~5.7%에 비하면 꽤 높은 숫자다.

30대 여성 또한 5.7%가 양당 후보가 아닌 곳에 투표했다. 이 20대 여성(15.1%)과 30대 여성(5.7%)의 '소수정당 지지'를 더하면, 약 20.8%다. 거칠게 말해 20·30 여성은 5명 중 1명꼴로 거대 여야가 아닌 '대안'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양당 구도를 깨뜨릴 가능성이 이들에게 있는 셈이다.

오세훈 몰표 준 이남자, 대안 찾는 이여자

오세훈에 몰표를 준 '이남자'는 누구일까. <시사인>이 2019년 3월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8개 문항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20대 남자 일부는 강한 '안티 페미니즘' 정서를 보였다.

조사에서 20대 남자는, '페미니즘은 남녀의 동등한 지위·기회 부여를 이루려는 운동'이라는 매우 당위적인 문장에 62.3%가 동의하지 않았다(전혀 동의 안 함 44.5%, 별로 동의 안 함 17.8%). 반면 '페미니즘은 남녀평등보다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한다'는 문장에는 78.9%가 동의했고, '페미니즘에 거부감이 든다'는 문장에 84.2%가 동의했다.¹⁾

한편 15.1%로 '비(非) 여야'를 택한 20대 여성은 사표(dead vote)를 각오한 것으로 보

1) 천관율·정한을 저, 『20대 남자』, 시사인북, 2019년 10월 1일, 43~50쪽·190쪽 등

인다. 여야를 떠나 ‘대안 세력’을 갈구하는 듯 읽히기도 한다. 이 표심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성평등을 내세웠던 소수정당·무소속 후보 5명(기본소득당 신지혜, 미래당 오태양, 여성당 김진아, 진보당 송명숙, 무소속 신지예 등)은, 실제 주로 대학가 투표구에서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9일 <뉴스타파> 분석에 따르면, 이 5명 후보가 6% 이상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투표구 인근에는 성신여대·숙명여대·이화여대 등이 있다.

이들은 사표를 두려워 않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다. 한 사회학 교수는 “2030 여성층이 가장 진보적”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²⁾ 다른 가능성을 꿈꾸는 2030 여성의 표심을, 언론과 정치권은 면밀히 분석해 봐야 한다.

성폭력에서 시작된 선거인데, 페미니즘이 문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크게 졌으나(서울 득표 격차 18.32%p, 부산 격차 28.25%p), ‘심판’이 반드시 전임시장의 성폭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15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사가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는 ‘민주당 패배 원인’을 묻자 ‘주택·부동산 등 정책 문제’(43%),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18%), ‘일방적 정책 추진(15%)’, ‘전임 시장 성추문 사과·반성의 부재(10%)’ 순서로 답했다.

젠더 이슈는 민주당이 진 여러 이유 중 하나일 순 있어도, 전부는 아니었다. 민주당 후보가 성평등 의제를 앞세웠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선거 뒤 보수언론, 남성 정치인은 여야 할 것 없이 이를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경쟁하듯 ‘페미니즘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선거 직후 한 20대 남성 의원이 ‘군 가산점 제도입’을 주장하는 등, 민주당 내엔 패배 원인을 페미니즘에서 찾는 기류가 강하다. 박영선 후보를 도왔던 한 의원은 “박원순 사건을 상기시킬까 싶어 성평등 공약을 적극적으로 못 냈다”고 했는데도 말이다.³⁾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민주당이 여성주의 운동에 올인해서 졌다”

며 갈등을 부추긴 게 그 시작이었다.

패배 원인을 페미니즘으로만 꼽는 건 게으른 해석이다. 이는 ‘2030 남녀 중 누가 더 불행한가’라는 소모적 불행 배틀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만 29세 남성 후보가 “청년 남성도(여성만큼) 약자”라며 민주당 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최근 상황은, 바로 그런 우려를 정확히 보여준다.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성평등은 과이 나누기가 아니며, 가부장제에서 남성 역시 벗어나야 할 상대이다. 그러나 일부 20대 남성은 ‘페미니즘=남성혐오, 여성우월주의’로 받아들이고 있다. 3월 말 발생한 김태현 ‘스토킹 가족 살인사건’처럼, 여전히 여성이 여성이란 이유로 살해되는 시대에도 말이다.

▲ 대안 찾는 2030 여성 표심을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안을 것인가 ▲ “페미니즘은 민주주의를 완성한다”⁴⁾는 것을 2030 남성에게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성폭력에서 시작됐으나 성평등 의제는 실종됐던 선거, 그 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다. 📌



7일 방송 3사(KBS·MBC·SBS)가 실시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



4·7 보궐선거에서 성평등을 내세웠던 후보들. 왼쪽부터 신지혜, 오태양, 김진아, 송명숙, 신지예

2) 이지혜, ‘20대 여성 가장 진보적 투표-20대 남성은 반대...왜 걸렸나?’, 한겨레, 2021년 4월 8일

3) 조소진, ‘민주당이 ‘페미니즘 과다’로 선거에서 졌다는 말, 사실일까’, 한국일보, 2021년 4월 14일

4) 정현백 저, 『연대하는 페미니즘』, 동녘, 2021년 2월 5일, 225쪽

2022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이 바꾸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서정숙

·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여성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남성 정치지도자가(트럼프 미국 대통령, 존슨 영국 총리,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만 초래한 것과는 달리, 여성 국가지도자는(아던 뉴질랜드 총리, 차이잉원 대만 총통,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 메르켈 독일 총리 등) 공감과 위로의 진솔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UN과 세계경제포럼(WEF)는 여성 리더십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열쇠라고 강조하였다.

마야호로 지금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이다. 대한민국의 반은 여성이지만, 그 절반을 대표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21대 국회의원 중 여성 국회의원은 57명, 19%에 불과하여, 2017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 28.8%보다 약 10% 낮은 수준이다. 지방선거의 경우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성 광역단체장 0명, 여성 기초단체장은 226곳 중 9명으로서 3.98%, 여성 지방의원은 26.4%를 기록하였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2.2%에 불과했던 여성 지방의원 비율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수치이지만, 한 집단 내에서 소수집단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저 임계치인 30%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여성의 정치 참여문제는 여성의 사회 지위 향상의 척도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한 국가의 청렴도와 부패 수준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공공분야에서 여성 비율이 높을수록 부패 수준이 낮아진다고 한다. 실제로 2019년 기준 국가부패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 대부분이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섬세한 여성이 정치, 사회에 많이 진출하면 진출할수록 우리 사회는 더 밝아지고 더 투명해지고, 더 발전한다고 믿는다.

지역 살림살이를 챙기는 생활 정치인 10년

지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득표율 79.6%로 서울특별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제21대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기까지 10년의 긴 시간이 걸렸지만,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시민의 삶과 함께한 생활 정치의 소중한 시간이었다. 공공장소 금연, 여성 화장실 확대, 서울시 공기질 개선, 어린이 공동돌봄시설, 여성을 위한 나비콜택시 운행 등 모든 의정활동의 초점은 남성 위주의 의회에서는 소외되었던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 약자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사회 약자로서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자 하는 정치철학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여성 의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생활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본래, 지방선거의 요체는 지역의 살림살이를 충실하게 챙기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일꾼이 누구인지 가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의원과 지역의 생활 행정을 책임지는 기초단체장은 중앙정치에 종속된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생활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꼼꼼한 일 처리는 지역 살림살이에 적격이며, 교육, 돌봄, 환경에 대한 이해가 높고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여성이야말로, '우리 아이와 여성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지역사회', '어르신과 장애인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준비된 후보이다.

제도 입법과 정당정치 변화로 여성대표성 확대를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대로 확보하는 길은 결국에는 제도적인 입법밖에 없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별 정당의 선의에 기대거나 선

언적 규정에만 매달릴 수만은 없다.

첫 번째 과제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현행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의 여성후보 30% 할당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함으로써, 여성할당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남녀 성비의 동등한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50%, 남녀 동수가 되어야겠지만, 그 전 단계로서 남녀 하나의 성이 최소한 40% 이상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9년 4월,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목적으로 여성구정장과 여성 지방의원을 주축으로 '남녀동수포럼'을 결성하고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것도 남녀동수가 정치개혁의 시금석이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할당제는 현재 제재할 수단이 없어 입법 실효성이 낮다.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위반할 경우 해당 연도 정당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강제조항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둘째,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 정당의 역할 문제이다. 정당은 말로만 여성정치를 확대한다고 하고, 선거가 임박해서야 여성 후보자 발굴에 나서는 생색내기식 구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여성 후보자 발굴 및 교육을 상시화해서 보다 많은 여성들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인재양성 상설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 문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설치된 여성추천 보조금제도가 본래 여성 정치발전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문체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대한민국호'의 선장을 결정하는 대통령선거에 바로 이어서, 6월 1일 선진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 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단위인 기초단체장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에 보다 많은 유능한 여성 후보를 당선시켜 지방자치의 역사가 한 단계 더 전진하기를 기대한다. 여성이 지역살림과 행정을 책임지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가 열린다. 대한민국을 바꾸어 나가는 주역은 바로 여성이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성 후보 좌담회 소수정당 선택은 새로운 진보 원한다는 강력한 신호

참석자

김진아(여성의당 전 공동대표)

송명숙(진보당 공동대표)

신지혜(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신지혜(기본소득당 상임대표)

4·7 재보궐선거는 사라진 젠더 이슈를 불러낸 ‘젠더 선거’였다. 보궐의 의미가 무색하게 여성 이슈가 실종되었지만, 20대 이하의 청년 여성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권자의 15.1%가 페미니즘을 내세운 소수 정당 후보를 선택하여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였다. 후보로 나선 이는, 새로운 진보를 원하는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다가갔는가. 한국여성의정이 이들의 외침을 듣는 명석을 깔아주었다.



좌장

권은희

(한국여성의정 이사,
제19대 국회의원)

권은희 선배로서 반갑고 감사드린다.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선 이유와 소감을 먼저 들려주시라.

신지혜 기본소득당은, 여러 불평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수라는 신념으로 지난해 1월 창당한 정당이다.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이 시대정신이라 생각한 기본소득당이 서울시민에게 대안을 드리고자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 창당 후 두 번째 치른 선거인데 지난 총선보다 더 힘을 모았다. 선거가 처음인 당직자는 이번 선거로 많이 성장했다고 자평했다.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대안을 알리는 준비운동을 끝낸 느낌이다.

송명숙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비롯한 사회의 불평등 문

제가 너무 절박하다. 진보당에서는 불평등 문제를 추상적이고 무미건조하지 않게 시민에게 알리고 싶었다. 끝난 후 내부 평가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강남 해체와 평등 서울을 외쳤을 때 재질문을 많이 받았다. 설명을 하면 강남 분들이 더 이해가 높았다. 진보당이 기득권 정치의 대안세력이 되려면 구호나 메시지를 더 친절하게 준비해야겠다는 반성과 고민을 하고 있다.

신지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선거를 대비해 작년 말부터 활동가와 지역민이 함께 선거시국회의를 가졌다. 시국회의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 누가 뭐래도 미투 선거인 만큼 권력자의 성폭력을 심판하고 두 번째는 위정당의 위법성을 정리하고 가자는 것. 거대 양당이 이러면 제3지대인 소수정당은 버틸 수 없다. 지자체의 권력을 견제하는 시민연합의 의미로 ‘탐서울’ 출마를 결정했다. 저는 무소속으로 6명의 부시장 후보와 함께 출마했다.

김진아 여성의당은 2020년 총선 한 달 전에 창당했다. 비례위성정당이 많았지만 여성의제에 집중해 첫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다. 이번 보궐선거는 위계에 위한 성비위



사건이 발단이므로 남성에게 연대의 책임을 묻을 수 있는 정당이 여성의당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후보를 내게 되었다. 두 번째 선거에서도 나를 좋은 순위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젊은 여성의 용기에 눈물이 난다

권은희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과 평가가 나왔다. 특히 2030세대의 투표 성향이 큰 흥미를 끈다. 예상한 결과인가?

송명숙 180석의 거대 여당이 일시에 뒤바뀐 것을 보고 민심은 현명하다고 느꼈다. 20대 남성이 보수화되었다는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지난 4년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본다. 청년 여성 15%의 군소정당 선택은 강남역 시위와 같은 20대 여성의 주체적인 정치 경험이 있어 가능했다. 다른 선택이 사표가 아니라 다양성의 사회를 지향한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신지혜 군소정당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가 힘든, 굉장히 어려운 선거판이었다. 그걸 뛰어넘고 소수정당이 선거를 치렀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지난 선거보다 진보했다면 모든 유권자의 표를 합해서 3%는 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아쉽기도 하다. 수치로는 2018년 이후 현상유지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여성 후보가 많이 출마했고 각자의 페미니즘을 얘기하면서 다른 결을

찾았다는 게 희망이다. 여성 유권자로 하여금 본인이 지지할 수 있는 정치인에 대해 고민을 하게 한 선거다.

김진아 20대 여성이 보여준 소수정당의 선택은 예측 가능했다. 기대보다 오히려 적은 수치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적은 수치일 것이다. 15.1%가 더 커질 일만 남았다. 스스로 입법과정에 참여하고 여성의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정당까지 만들었다. 이 생각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여성이 우리 당 후보에게 표를 준 것이다. 임금 성차별, 채용 성차별, 성별 노동분업, 돌봄의 편중 등 쌓인 문제를 기성정치가 해결하지 못했다. 이 기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도를 나갈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본다.

신지혜 부동산 폭등과 권력형 성비리로 민주당 심판 선거로 귀결되리라 예상했다. 그래서 소수정당의 많은 득표를 기대하지 않고 선거에 임했다. 당원의 85%가 30대 이하이고 당직자도 밀레니얼 세대다. 밀레니얼 세대에 맞는 슬로건과 디자인으로 소구했다. 2030세대의 호응은 예상했지만 다른 세대와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은 몰랐다. 보선이어서 특히 용기를 냈는지, 심판 의지가 다른 세대와 달라서 그런지 다음 선거를 보면 더 드러날 것으로 본다.

권은희 이제는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같은 세대로서 청년층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떤 식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김진아



송명숙



신지예



신지혜

신지예 20대 여성이 투표한 결과를 보면서 좀 울었다. 투표를 허투루 하지는 않는다. 혼자 들어가는 투표소에서 1번도 2번도 아닌 제3정당을 선택한 건 큰 용기다. 더구나 20대 아닌가. 난 첫 투표를 사표가 될까 무서워서 그렇게 못했다. 고루한 표현이지만 그들은 각성한 여성이다.

20대 여성 자살율이 심각하다. 비정규직과 박봉에 시달리다 보면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런 절박함을 정치권이 인식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절박함에서 나온 다른 선택지이다. 20대 여성의 이기심으로 해석하지 말고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 달라.

신지혜 시장에서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 청년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니까 청년을 소비자로 대하는 마케팅이 시작되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선거 한철의 소비자로 청년을 바라보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 처음 내놓은 청년공약이 반값데이터나 교통요금할인 같은 것이었다. 불공정과 불평등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우는 아이 달래듯 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청년 세대의 분노를 일으켰다. 기성세대가 가진 것을 동등하게 나누려는 동등한 주체자로 청년을 바라봐야 한다.

여성의제를 누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권은희 권력형 성범죄로 시작된 이번 선거가 여성의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여성의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까?

김진아 여성의제를 다뤄야 할 거대 야당이 오랫동안 뒷전으로 미뤄놓고 그들의 세력다툼이나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에만 집중해왔다. 스토킹범죄방지법만 해도 수십년 계

류하다가 22년 만에 간신히 통과시키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은 여성 안전과 주거, 일자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공약을 만들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앞으로 실제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성의제를 다루겠다.

신지혜 임신중단약품을 보건소에서 구입, 무상생리대 지급, 디지털 성폭력 N번방 없애기,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같은 여성 관련 공약이 좋은 호응을 얻었다. 삶에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는 데 정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양당은 핑퐁처럼 미루기만 한다. 낙태죄 폐지 후 여성 건강에 대한 대비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도 어떻게 다룰지 고민하고 있다. 당내에서 페미니즘 의제 조직을 만드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려 한다.

송명숙 일상의 성폭력 대책이 필요하다. 여성 성폭력이 30인 미만 사업장 1년차 신입직원에게 가장 많이 일어난다. 이런 소규모 사업장이 97%가 넘는데 이런 테일수룩 성폭력 대책 메뉴얼이 없다.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감내한다. 본인이 성폭력을 입증해야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다. 경제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하는 실질 조치가 필요하다. 노동 현장의 성범죄 대책을 의무화해야 한다. 저임금, 미숙련, 불법노동에 여성이 내몰려 있다. 돌봄 노동자도 80-90%가 여성이다. 페미니즘을 넘어서 인권 문제로 여성의제를 다루어야 한다.

신지예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피해자를 향한 조직적이고 근대적인 2차 가해가 유명인과 정치인 사이에서 일어났다. 기이한 선거규정 때문에 성폭력으로 일어난 선거 중에 제대로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고 2차 가해자를 비판할 수 없었다. 어떻게 보다 누가, 여성 의제를 다룰 것인가

가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 발언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서야 한다. 결국 여성 정치인이 양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남자’는 없으니 남녀갈등을 조장하지 말라

권은희 젊은 남성과 여성이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결과로 성별갈등으로 평가하고 조장하는 경우도 있다. 페미니즘이 민주주의를 완성한다는 사실을 ‘이남자’(20대 남자)에게 어떻게 설득할 생각인가?

송명숙 ‘이남자’라는 호명은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행위다. 성별 갈등이나 제도는 분명 있지만 실제 없이 혐오만 부추기는 정치인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일 자리나 주거 같은 근본 해법이 있어야 하는데 청년 세대의 불안과 불평등을 성별 갈등으로 호도한다.

신지혜 ‘이남자’는 없다고 본다. 원래는 ‘이영자(20대 영남 자영업자)’였는데 ‘이남자’만 가져와 이남자와 이여자의 갈등을 만들었다. 정치권이 분위기를 조장하고 질 낮은 말싸움을 하고 있다. 반응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끼어들지 않고 있지만 어느 순간 선을 넘었다. 나서야 하나 고민이 된다. ‘이여자’에게 집중해주길 바란다. 20대 여성이 함께 모여 어떤 꿈을 꿀 것인가. 여성 해방과 사회평등을 만드는 주체로서 평등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김진아 성별갈등으로 조장하는 정치인 언론, 그에 장단 맞추고 제도를 입법하겠다는 여당, 20·30대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실체가 불분명한 ‘이남자’는 설득의 대상이 아니다. 20대 여성의 자살 문제 같은 데에 이렇게 관심을 쏟았나 묻고 싶다.

권은희 군소정당의 활약이 한국 정치의 양상을 많이 바꾼 선거였다. 각 후보의 이번 선거 이후 행보는?

송명숙 야간 아르바이트 해야죠 ㅎㅎ 밤샘 택배 노동자 중 청년이 많은데 건강을 담보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

다. 실제 어떤 법제도가 있어야 하는지 현장에 가서 일을 해보고 청년들도 만나보려고 한다. 청년진보당 대표로서, 2030세대를 어떻게 주체로 만들 것인지 전국 당원과 대학생, 직장인 모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할 계획이다. 의제를 연구 중이다.

신지혜 무소속으로 함께 출마한 ‘팀서울’을 중심으로 선거 종합평가토론회를 몇 차례 했는데 아직 남았다. 전임 시장 성폭력의 피해자 재판도 진행 중이다. 2차 가해가 무엇이며 어떻게 공권력을 투입하고 징계를 할 것인가, 2021년의 성폭력 싸움으로 좋은 사례인데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다시 정리하는 작업을 하겠다.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 대응도 해야 한다.

김진아 선거를 통해 여성의당이 성장하고 있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대선 총선을 준비하면서 내부에서도 여성 정치인을 발굴 육성하는 과제가 있다. 선거 끝났으니 다시 정당으로 돌아가서 역할을 찾겠다.

신지혜 용기있는 사표가 잘 투자했다는 효능감이 들도록 희망의 좋은 정치를 하겠다.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에 더 많은 여성과 청년이 출마하도록 전략 짜는 게 당장의 과제다. 성평등과 기본소득을 내세우는 시장 후보로 본인도 준비하겠다.

권은희 2030세대의 키워드는 무엇이라 할 수 있는지 각기 한마디로 해주시라.

2030세대 키워드

신지혜 평등과 다양성

김진아 더 이상 참지 않는 세대

신지혜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하는 세대

송명숙 새로운 기준

권은희 준비된 질문이 아닌데도 곧바로 멋진 키워드가 나온다. 솔직담백한 말씀 감사하다. 앞으로도 좋은 여성 정치 기대하겠다. 🍷

미래세대를 위한 길 탄소중립 사회는 도전이며 기회

환경부 장관
한정애



Q 취임사에서 밝힌, 국민과 미래세대의 칭찬을 받고 싶다고 한 소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후위기로 문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준다면 “여러분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맨 앞에서 서서 화살을 맞겠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다짐했다. 소신과 철학을 지키며 국민과 미래세대 그리고 자연환경을 위해 묵묵히 일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긍정의 성과를 거두고 자연스럽게 국민의 칭찬도 있을 것이다. 좋은 정책은 그 정책의 영향을 받는 국민의 요구가 있고 지지를 받아야 하며, 이론적으로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동의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

Q 환경부가 2021년 3대 부문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가장 역점을 두는 과제가 무엇인가?

지난 2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을 비전으로 3대 부문 10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환경부 업무는 미세먼지, 폐기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그중에서도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과제인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 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범부처 차원의 분야별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 시민사회와도 충분한 소통으로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하다.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차 분야와 앞선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신산업과 녹색경제 전환을 성공시킨다면,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경제성장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Q 코로나19는 환경파괴로 발생한 재앙인데도 장기화하면서 1회용품 사용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대책이 있다면?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되어 모두가 많이 지치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환경관리 측면에서도 의료폐기물의 증가, 1회용품 증가 등 상당한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2019년 대비 지난해 음식 배달 78%,

택배 21%가 증가하는 등 재활용 폐기물이 약 12% 늘었다. 이로 인해 폐플라스틱, 폐비닐도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는 생산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나가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플라스틱 음식 배달 용기 두께를 제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재질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 배달에 1회용 수저 사용을 제한하고 비닐봉투와 같은 1회용품 사용규제를 확대하겠다.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소중한 자원으로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하겠다.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플라스틱 재질을 단일화하고, 투명 PET병 등 폐플라스틱을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겠다. 폐비닐 등 잔재물이 섞인 폐플라스틱은 열분해 또는 가스화를 통해 원료로 다시 사용하고, 재활용 산업 촉진을 위해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재활용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사회 전반의 1회용품 소비문화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는 활동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청사 내 회의나 행사에서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직원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다른 공공기관으로도 확산해 나가는 중이다. ‘불편해도 괜찮아!’ 캠페인, 플라스틱 용기를 버리고 다회용 용기 사용을 장려하는 ‘나부터 다회용’ 캠페인, 나부터 실천하는 ‘고고 챌린지’ 캠페인도 하고 있다.

Q 재활용품·생활폐기물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의 실천 과제는 무엇이 있나?

가정에서 소비하는 1회용품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들이고, 발생한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바르게 분리된 재활용품이 다시 원료로 산업활동에 쓰인다면 순환경제 틀 속에서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다. 특별히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는 고품질 재활용품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제도의 성공 정착을 위해 모두의 적극 동참이 필요하다. 올해 5월부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자원관리도우미’ 8천 명을 배치하여 분리배출을 도울 계획이다.

Q 3선 의원을 지냈다. 국회와 정부에서 일하는 차이가 있다면? 정치인을 꿈꾸는 여성에게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법안 발의와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행정부에서는 직접 정책을 구상하고 법률을 집행하며, 국민의 일상의 문제에서부터 국가 현안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국회의원과 또 다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정치를 하려는 후배들에게는 ‘왜? 무엇을 위해?’ 정치인을 꿈꾸는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정치인이 무대 위의 화려한 조명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늘 국민 편에서 사회 약자와 함께 고민하고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들어야 하는, 힘겹고 어려운 길이기도 하다. 대만의 총통인 여성 정치인 차이잉원이 ‘나약해질 권리는 없다’고 한 것처럼 정치를 하게 된다면, 남성과 여성의 구별은 없고 오직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과 책임만 남게 된다. ♡

interview

김혜성

- 한국여성정책 사무총장
- 제18대 국회의원



왼쪽) 기후금융지지선언식방문 가운데) 설맞이 전통시장
오른쪽) 방문페트병 선별장 현장



여성 고용과 가족 돌봄, 여가부가 힘쓰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Q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뿐 아니라 가족과 청소년 관련 정책도 맡고 있다.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지난 20여 년간 여성 인권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 호주제 폐지, 성별 영향평가법 제정, 성인지예산 도입 등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성폭력방지법(2010)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2018) 등을 제정하여 여성인권 향상에 기여했다. 또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위기청소년 등 사회 약자를 지원해왔다. 여전히 개선해야 할 성차별 사회구조와 문화가 있어 여성가족부의 책임이 아직 크다. 출범 20주년이 된 지금은 성과를 발판으로 더 굳건하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Q 특히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디지털 성범죄는 그 피해를 가늠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고종대한 범죄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범죄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하였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연령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하였고,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신분 위장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보호도 강화했다. 성착취물 사전 모니터링과 24시간 상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도 보완하여 초기상담에서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 의료·법률·수사 연계 지원까지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마련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

Q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 추진하거나 시행하는 핵심 정책은 무엇인가?

저출산 문제는 결혼과 출산의 비용 부담으로 삶의 질이 낮아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돌봄 책임이 여성과 가족에 치우쳐있는 사회 환경 탓이라 생각한다. 이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청년과 여성 당사자의 관점에서 미래 삶의 질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야 한다.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가기 위한 성평등한 경영 공표제 도입과, 여성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경력단절을 낮추는 일터의 성평등 실현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결혼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 구성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 제도와 인식 개선에 역점을 두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Q 자녀 돌봄 문제는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로 코로나19 이후 더욱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 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3월부터는 부분 등교 등으로 자녀가 집에 머무르는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던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까지 포함해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 요금의 40~90%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현장에서 애쓰는 의료와 방역 인력의 아이 돌봄 지원을 위해 시간과 요일 제한 없이 이용 요금의 60~90%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 외 방과 후 아카데미나 공동육아 나눔터 등도 긴급 돌봄시설로 전환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

Q 여성 일자리가 지난 한 해 많이 감소했다.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2019년까지 상승 추세를 보였던 여성 고용 상황이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3월 4일 발표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에는 노동시장의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여성 일자리 체질 개선 과제도 함께 들어있다. 우선 즉각적으로 고용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돌봄, 디지털, 방역 등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민간부문 여성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여성이 신속하게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과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성 격차 해소 등 일자리 체질 개선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공계 등 미래에 유망한 산업 분야에 청년 여성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위)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021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위대한 여성, 함께하는 대한민국'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아래 왼쪽) 여성가족부 출범 20주년과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함께 만든 20년, 함께 이룰 20년'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1년 여성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 아래 오른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종사자들과 이주여성들을 만나 이주여성 지원 현황을 살피고 있다.

Q 그 외 현재 여가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을 말씀해주신다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위기에 있는 청소년을 일찍 찾아내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체계화하기 위해, 기존에 나뉘어 있던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정보시스템'을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상의 각종 신종 청소년 유해 정보를 꼼꼼하게 모니터링하여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정례화, 2023년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 등,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 🌸

interview

신 명

-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
- 제17대 국회의원



포스트 코로나의 경제 디지털에서 탈세계화까지



이혜훈

- 한국여성의정 공동대표
- 제17, 18, 20대 국회의원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 가치관, 생활방식, 근무형태, 산업구조는 물론 부모자식관계까지 바꾸고 있다. 경제를 구성하는 이런 요소가 바뀌는 만큼 코로나는 경제에서도 AD와 BC만큼이나 확연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우선, 디지털경제가 가속화될 것이다.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대면 접촉을 통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서서히 진전되고 있던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온라인쇼핑, 배달서비스 등이 이미 오프라인 소비를 대체하고 있고, 영화, 의료, 교육, 행정 등에서도 디지털경제가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코로나 기간 중 오프라인 의료기관과의 의료인력 부족을 경험한 이후 환자가 디지털기기를 이용해 건강 관련 데이터를 생성·저장하면 병원이 이 데이터를 활용해 환자를 관리하고 치료법을 개발하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교육의 경우도 온라인 강의는 이미 일상화되었고, 중국은 일부

소학교에서 AI(Artificial Intelligence)교육을 시작했다. 초등학생들의 인체신비 수업을 예로 들면, AI교사 안내에 따라 AR(Augmented Reality)글래스를 착용하고 증강현실을 통해 인체기관들의 생김새나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보고, 가상현실 영상에서 실제 혈관으로 피가 돌고 있는 것까지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시대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다.

디지털경제는 산업구조도 급속히 재편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코로나 확산의 인력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자 생산시설의 무인자동화와 유연생산화 등 스마트팩토리로 전환하고 있다. 제조업의 스마트화뿐 아니라 서비스업도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어 ICT(정보통신기술)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8대기업 중 ICT기업이 2009년에는 한 개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7개 기업이 ICT기업으로 채워졌다는 점에서도 산업구조의 재편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발발 1년 만에 온라인상거래 신규이용자는 9%, 온라인 영화 신규이용자는 7%, 재택근무 및 e러

닝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이용자는 2.3배가 증가한 것만 봐도 디지털화의 가속화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된다. 지난 1년보다 앞으로의 가속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가 예상된다.

디지털 전환은 비대면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재택근무, 원격근무, 플랫폼노동자, 단시간 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내는 측면도 있지만, 중·저숙련 근로자를 비롯한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를 줄이고, 구인·구직자 간의 미스매치와 부문 간 고용격차와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다.

디지털 전환은 중숙련 근로자가 주로 담당하던 정형 업무의 비중을 줄이고 디지털경제에 필요한 기술에 익숙지 않은 저기술·비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를 줄임으로써 일자리 양극화를 초래한다.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디지털 관련 직무능력이나 기술을 익힐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필요한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들은 고학력에 기술을 갖춘 일부 계층에게 돌아가고 결국 일자리, 소득, 부가 이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 양극화가 고용, 임금, 소득, 부의 양극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 기간동안 여성, 저학력근로자, 임시일용직, 소규모사업체 종사자, 식당 종업원이나 오프라인 판매원같이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업군 종사자들이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대면서비스 종사자가 41.4%, 오프라인거래 종사자는 10.1%, 임시일용직 종사자는 67.6%나 줄었다.

다음은 탈세계화의 확산이다.

코로나위기 국면에서 감염병 유입 방지를 명분으로

출입국관리가 강화되면서, 하나의 상품이 여러 나라에 걸친 다양한 생산 단계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GVC(글로벌가치사슬)가 약화되었다. 결국 각국은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등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경제현상을 결정짓는 경제주체들의 행태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기업의 경우 자가격리 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겪으면서 노동의존도를 줄이고 자동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또 과거에는 비용절감 등 효율성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효율성 외에도 불확실성에 대비한 복원력·유연성도 주요 관심사가 되면서 현금보유에 대한 선호가 강화되고 과감한 투자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개인의 경우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실업, 소득감소, 경제활동 제약 등을 경험함으로써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고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해 저축 유인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 비대면 서비스 등 디지털경제에 익숙하지 않던 사람들도 불가피하게 디지털경제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혁신에 대한 순응도가 높아졌다.

정부 역할이 코로나위기를 거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한번 확대된 정부 역할은 그 이전 수준으로 쉽게 줄어들지 않는 경향이 있다.

요약하면, 이러한 변화의 속도나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코로나위기가 종식되더라도 경제주체들의 행태나 경제구조가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다. 완전히 새로운 구조변화를 일으킨다기보다 기존에 더디거나 점진적으로 진행되던 구조변화를 촉진시키고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

여성의정인물사 시리즈 ④ 정착기편

『세상을 바꾼 여성 정치인들』

제4호 발간



황인자

- 한국여성의정 이사
- 제19대 국회의원

한국여성의정에서는 여성의정 70년을 기념하여 여성의정인물사 시리즈를 기획, 출판해 왔다. 제1호 개척기, 제2호 과도기, 제3호 안정기에 이어 이번에 제4호 정착기편이 출간되었다. 여기에는 지난 과도기와 안정기편에서 빠졌던 의원 5명(박혜경, 김영선, 신낙균, 이미경, 임진출)과 제16대 의원 14명 등 총 19명의 여성 국회의원을 수록했다.

남(男)다른 역할모델이 되어야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중에는 상징성이 포함된다. 정치하는 여성의 역할모델이 많아져야 후배 여성의 정치 참여도 활발해진다. 여성의정인물사는 여성 국회의원의 당시 의정활동을 기록하여 역할모델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미래 우리의 딸들도 정치 참여의 의지를 불태우고 도전할 수 있게 만든다.

여성의정인물사 시리즈는 의원 개인의 자서전이 아니라 평전에 가깝다. 이번 제4호도 마찬가지로 여성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전이다. 뉴 밀레니엄 2000년도에 임기가 시작된 제16대 국회는 여성 국회의원의 활동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정착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 비례대표 50% 공천할당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해가 바로 2000년이다. 이 시기에 국회에 들어온 여성은 거의 대다수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였으니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문제를 보고 풀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여성부를 발족시켰고 여성운동도 정착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였다.

여성으로선 최초 또는 최고의 경지를 개척

정착기에 앞서 활동한 여성 국회의원의 면면을 보면 일찍이 제12대 의원을 역임한 박혜경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김영선 의원은 제15대 국회에서 전국구 의원으로 진출한 이래 제16대에서 비례대표로 제17~18대에서는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한 4선의 경력을 보유하는 기염을 토했다. 여성으로선 최초로 당 대변인을 역임하였다.

신낙균 의원 역시 제15대 국회에서 전국구로 진출한 이래 여성 최초의 문화관광부장관을 거쳐 제18대 국회에서 다시 비례대표로 2선의 경력을 쌓았다. 임진출 의원은 경주 지역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현장 정치에 뛰

어든 이래 제15대에서 무소속으로 진출하고 제16대에서는 비례대표로 다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이미경 의원은 제15대에서 전국구로 진출한 이래 제16대에서 비례대표로 그리고 제17~19대 국회에는 연이어 지역구 의원으로 진출하면서 5선의 관록을 가지게 되었다.

이 다섯 의원은 최초 또는 최고의 경지를 개척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소신을 세워 남녀평등한 세상을 실천하고자 애썼다. 제16대 국회에 들어와 정착기에 다다를 수 있었던 데에는 이들의 공적에 힘입은 바 크다.

제16대 여성 국회의원 대다수는 초선의 비례대표

정착기에 활동한 제16대 여성의원 14명의 기록이 여기 4편에 수록돼 있다. 이 중 다선의 조배숙, 전재희, 한명숙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선이다.

우선 조배숙 의원은 최초 여검사 출신으로 제16대에서 비례대표로 진출한 이래 제17·18·20대에서 지역구로 진출해 4선의 경력을 쌓았다. 전재희 의원은 제16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진출한 이래 제17·18대에서 지역구로 진출하여 3선의 경력을 쌓았다.

전재희 의원은 관선·민선을 통틀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시장을 역임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도 올랐다. 한명숙 의원은 제16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진출하고 이어 제17대에서 지역구로, 제19대에서는 다시 비례대표로 진출하여 3선의 기록을 쌓았다. 여성으로선 우리나라 최초로 국무총리를 역임하였으며 그 전에 초대 여성 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을 두루 역임하였다.

제16대 국회의원 중 김경천, 김희선 의원은 지역구 초선의원이다. 광주 지역의 대표적인 김경천 의원은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에도 힘썼다. 김희선 의원은 사회변혁을 꿈꾸며 치열하게 살아온 정치인이다.

비례대표로 제16대 국회에 진출한 초선의원 9명의 면모를 살펴보기로 하자. 김화중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보

건의의 전문성을 살려 의정활동을 하였다. 박금자 의원은 산부인과 의사 출신으로 시민사회운동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국회에서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였다. 안상현 의원은 정치란 권력을 통한 봉사활동이라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김방림 의원은 여성할당제의 신호탄을 쏜 똑심의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손희정 의원은 여성기업인 출신으로 경북도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이연숙 의원은 홍일점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준치를 이끌어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정무장관(제2)을 역임하였다. 최영희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보건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였고 이연숙 의원과 함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출신으로 여성할당제 도입에 기여하기도 했다. 허운나 의원은 인터넷 선거운동의 개척자로 평가되고 있다. 제16대 국회의 막내 안희옥 의원은 비례대표 승계를 받아 한 달도 채 안 되는 짧은 임기를 보냈다. 서울시 행정의 달인으로 알려진 안희옥 의원은 국회의원에서 서울시 의원으로 역주행하는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상과 같이 제4호에 수록된 여성 국회의원의 면면을 살짝 훑어보았지만 모두 나름대로 각자의 전문 식견, 사회활동 경력과 여성 이슈에 대한 남다른 시선으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들의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둘러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정착기편을 읽어 보면 이제 이 시기에 여성 국회의원은 여전히 소수이지만 남다른 의정활동으로 여성의 지위 향

상과 남녀평등 확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여성의정인물사 시리즈 제4호 정착기편은 독자들에게 전작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현실 정치에서 여성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 왔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딸들에게 도전하고 개척하는 여성 정치인의 역할모델을 제시해 줄 것이다. ♡



여성의정 정치학교 교재

『정치! 이것부터다』 『출발! 함께 합시다』



김혜성

- 한국여성의정 사무총장
- 제18대 국회의원

한국여성의정이 <여성의정 정치학교>의 기본·전문 과정보충교재를 발간했다.

<여성의정 정치학교>는 지역에 근거해 차세대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고 양성하여 정치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사회로 가기 위해 한국여성의정이 운영하는 여성정치 교육기관이다. 여성주의 문제의식과 성평등 가치의 함양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교육 목표로 중견 여성 정치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공론의 장(場)이기도 하다.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는 정치학교

<여성의정 아카데미>는 2016년 10월 25명의 수강생이 함께한 부천 아카데미 여성리더십과정 시범사업에서 시작했다. 해를 거듭하며 여성 정치인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져 2020년은 서울을 비롯한 8개 지역 아카데미에서 249명의 여성 정치지도자가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년)에서 55명의 교육생이 기초의원예 당선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여성의정 아카데미>를 <여성의정 정치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차세대 여성 정치인 발굴과 당선을 위해 정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여성정치 세력화 운동과 여성 정치참여가 주요한 변



혁의 의제가 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성참여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제도 개선을 시작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우리 사회의 뿌리박힌 남성 기득권 중심의 정치 네트워크 환경에서 선거 때마다 “마땅한 여성 후보가 없다”는 변명을 늘 반복하지만, 여성 후보자 발굴·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었던 적은 없었다.

최근 실시한 4·7 보궐 선거 결과 분석에서 한결같이 주목한 내용은 2030세대의 표심이다. 그들의 요구는 문제해결 능력과 비전을 갖춘 세력이나 인물에게 표를 주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 핵심이 후보자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후보자의 역량 강화는 미래의 여성정치를 원하는 유권자의 뜻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여성의 정치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세대를 넘어 공감하고 있지만 예산과 전문성 부족으로 한계가 많았다.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운영해온 여성정치교육프로그램은 단계별 교육 콘텐츠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역 간 교육 기회가 불균형하며 한시적으로 개설하는 등 지지부진한 현상을 보여 아쉬웠다.

전문성 강화와 차별 교육을 위한 보충교재

〈여성의정 정치학교〉는 2022년 지방선거와 그에 대비한 교육인 만큼 기존의 여성 정치교육의 한계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여성정치 교육체계를 마련했다.

기본과정과 전문과정 등 단계별 정규교육과 정규교육 외에 단체장과정, 당선자과정, 선거지원 봉사자과정 등 개별 상황에 맞게 수시로 개설하는 특별교육을



설계하였다. 지역별 정치학교 운영을 통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교육 후에는 지속성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연대로 조직 확대의 효과가 생겨 지역 선거에서 당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후보자 역량 강화의 효과적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교육 콘텐츠 부재에 따른 전문성 결여와 지역과 기관마다 차별성 없는 교육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보충교재를 개발해

해당 분야의 수강생 학습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기본과정의 보충교재인 『정치! 이것부터다』는 기본과정의 필수 과목에 따른 내용으로 헌법, 지방자치, 정치와 여성, 젠더와 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재는 예비정치인들에게 필수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으며, 정치에 도전하고자하는 여러 예비정치인들의 첫걸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전문 과정의 보충교재인 『출발! 함께 합시다』는 정치 영역에 진입하기 위해 정치 훈련을 받기 원하는 여성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치일반, 선거법, 효과적인 선거 조직, 선거운동 전략, 홍보 전략, 이미지 형성, 스피치 요령 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전략서이다. 2017년에 발간된 바 있는 『알쓸新선』(알아두면 쓸모있는 새로운 선거이야기)의 개정증보판이다.

성평등 사회에 대한 자각과 평등한 시민으로서 자질과 권리를 갖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여성정치교육! 모든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대상이 되는 기본적인 정치교육이 되었으면 한다.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1기

‘남다른
열정과 패기’로
석사 땀어요

정치·정책 분야 박사로 이어가겠다

이은채 | 박사과정, 경기도 광주시의회 의원



의회학과 처음으로 석사 졸업 후 박사과정까지 진학한 사례다. 박사까지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석사과정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석사과정에서 끝내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박사과정을 다시 시작하면 아무래도 실패로 끝날 것 같았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바로 이어가는 타이밍이 효과가 크리라고 판단했다. 전국 최초 유일한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1기 석사 졸업생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박사과정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교수님과 원우들과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석사논문은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였는데, 박사과정에서는 어느 분야를 세부 전공으로 할 것이신지?

박사과정에서는 정치·정책 분야에 비중을 두고 공부할 생각이다. 석사과정에서 주로 공부한 행정 분야와 현장 중심을 토대로 정치·정책 분야를 겸한다면 더 넓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사과정을 통해 실력을 향상하여 시대가 원하는 역량을 갖추겠다.

지방도시 인구감소 문제로 논문 쓰다

구정화 | 석사, 경남 사천시의회 의원



의회학과 과정이 의정활동 전반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커리큘럼 자체가 의회정치, 지방자치, 입법연구조사 방법, 도시정책, 거버넌스, 커뮤니케이션 등 의정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분야여서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었다. 특히 청년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제정하는 데 자극과 영감을 얻었다. 또 학우인 다른 지역 의원과 소통하며 여러 정보도 얻고, 도움을 받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었다.

사천사에서 먼 거리인 서울을 오가며 공부해서 졸업한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목표를 한번 정하면 딱심 있게 하는 성격이다. 의정 활동을 하면서 사천에서 서울까지 왕복하느라 지치고 힘든 때도 있었고, 지긋한 나이에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젠더문제, 인구감소, 연금개혁, 환경, 여성정치 등 다양한 분야와 특히 그동안 관심 있었던 지방 중소도시의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와 관련한 석사 논문인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이 이주계획에 미치는 영향 연구」로 학위를 받을 수 있어 뿌듯하다.

지방의회정치의 변화를 끌고가겠다

김미숙 | 석사, 경기도의회 의원



‘공부하는 의원’으로 소문나 있다. 의정활동의 자세나 비결이 있다면?

군포의 약사회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오다 정치에 입문하였다. 정치를 준비해온 것도 아니고 전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도민의 대표로서 온전히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장 낮은 자세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방정부와 의회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어 항상 배움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려 한다.

석사과정을 마치면서 전문성과 역량이 더 커졌을 것 같다. 어떤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신지?

올해는 지방의회 정치가 30년이 되는 해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 지방의회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학위 논문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를 쓰면서 지방의회에 대해 공부를 하며 각종 현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규모 광역의회로서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발로 뛰겠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

윤영희

석사, 서울 금천구의회 의원



지역구 의원 당선 전에도 자원봉사 경력이 많다. 정치도 자원봉사 외연의 확장이라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의회학과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자원봉사와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다가 2018년 금천구의회 최초 선출직 여성 의원이 되었다. 당선이라는 기쁨도 잠깐이고 여성 의원에게 거는 구민의 기대로 어깨가 무겁기만 했다. 구민을 살피고 소통하는 역할은 자원봉사 경험으로 익숙했지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의 심의·확정·결산승인,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생소한 역할을 접하며 의원으로서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석사 공부를 의정활동에 어떻게 접목해 나갈 계획이신지?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부족한 점을 찾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면 끊임없는 능력 배양이 절대적이다. 대학원 의회학과를 통해 배우고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통해 주민의 권익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품격 있고 역량 있는 여성 의원으로 주민의 격려와 도움이 헛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지역민과 소통하며 논문 쓰는 기쁨 컸다

한향숙

석사, 경북 칠곡군의회 의원



2018년부터 칠곡군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시는데, 학업 활동이 쉽지 않았겠다. 배움을 이어가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다면?

기초의원 3선을 하는 동안 끝없이 세미나, 연찬회, 강연회 등을 다녀 봤지만 항상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2019년 학업을 중단했던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복학을 준비하던 중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입학 제안을 받고 응시하게 되었다. 거리가 멀어 많이 망설였지만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시작해서 졸업까지 하게 되어 너무나 영광스럽고 행복하다.

앞으로 어떤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신지?

헌법학을 배우면서 어떤 방법으로 검토와 연구해서 제정과 개정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어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실현 가능한 과제를 선택해 집중해서 연구하는 법도 배웠다. 논문을 쓸 때도, 우리 지역 문제와 평소 고민하던 점을 지역민과 소통하면서 글로 옮기는 과정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제는 기초를 벗어나 광역에서 여성위원의 역할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고 일해보고 싶다는 다짐을 해본다.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1기 석사 논문

『여성의정 장학생』 선발 안내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정책과학대학원 공공정책학전공 정치리더십 분야

국내 최초로 일반대학원에 「의회학과」를 설치하여 석·박사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학과는 의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여성정치인 교육을 목표로 정치학·법학·행정학·여성학을 두루 아우르고, 철학·국제학·경영학·심리학·사회학·사회기반시스템공학·갈등조정 등의 융합과 통섭의 역량을 갖춘 여성정치인을 배출하고자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공공정책학 전공 정치리더십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치인 교육을 목표로 의회활동, 정치활동, 지방행정 등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전문 지식 뿐만 아니라, 사회 리더로서 정치 철학, 역사, 문화 등의 소양을 함께 갖춘 정치인을 배출하고자 합니다.

모집분야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과정
수여학위	의회학 석사, 박사

모집분야	정책과학대학원 공공정책학전공 정치리더십 분야
수여학위	정치학 석사(공공정책학 전공)

[공통사항]

지원대상	전·현직 지방의회 여성의원, 전직 지방자치단체장, 전직 여성 국회의원, 7급 이상인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여성, 한국여성정책이 운영하는 여성정치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여성
지원사항	4학기 총 등록금의 2/3 (여성의정 장학금 1/3, 대학 장학금 1/3)

※ 모집전형 시기는 대학원 학사일정에 의함

돌봄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미래다

김주영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Q 외부에서 국회를 볼 때와 국회의원으로서 알게 되는 국회가 다를 것 같다.

국회는 여론을 수렴하고 갈등을 공식화하는 공간이다. 한국노총 위원장일 때도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 일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다만 훨씬 넓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다루게 됐다는 점이 많이 다르다. 정부와 시민, 노동과 기업, 젊은 세대의 젠더 문제 등 여러 사회분열을 조정해야 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과제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다.

Q 노총 위원장으로 일할 때부터 여성에게 중책을 맡기는 등 함께 일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여성의 어떤 역량을 높이 보는지?

모든 여성은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 어떤 한 가지 역량만이 여성의 강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떤 특성은 여성의 강점이다'라고 하면 또 다른 스테레오타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사회가 갈수록 양극화되고 분열되고 있어 포용과 공감, 배려와 소통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보면 여성이 대체로 높은 공감과 소통 능력, 포용력의 역량이 뛰어나지 않나 생각한다.

Q 아동학대 문제와 돌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아동학대와 돌봄 문제에 관해 공동발의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정비할 것인지?

아동학대를 비롯한 가정폭력을 예전에는 큰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한 사람의 인생에 큰 피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라는 것을 인지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 제도가 미비한 부분이 많다.

정말 기본적인 것, 예컨대 신고가 들어오거나 정황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분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후에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 모두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간 우리 사회가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결국 정인이 사건처럼 큰 문제가 이미 일어나고 나서야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기본적인 지원과 보호, 처벌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물론 궁극 목표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인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제도가 인식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입법자로서 계속 노력하겠다.

Q 여성 안전을 위한 정책연구, 인식개선 교육 등 여성 관련 사업에서는 정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까?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해당 가해자만을 ‘악마화’하여 선정적인 기사가 쏟아지고, 여론의 초점은 ‘강력 처벌’에 맞춰지는 경향이 있다. 처벌은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양형기준과 기준 판례 등 기본적으로 길고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동력이 떨어지고, 더 근본적인 원인을 되짚어볼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N번방 사건이나 권력형 성범죄는 소수의 ‘악마’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성차별의 분위기가 원인이다. N번방 사건의 경우 범죄에 가담하고 연루됐던 그 많은 가해자가 10·20대 남성이었다.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추구하고 실제로 많이 변화해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치를 이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에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보여주는 일이었다.

실제로 여성이 겪고 있는 일상의 위협과 불안에 비해 제도가 국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연구와 인식개선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성인지 예산도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니 앞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도 기재위 위원으로서 최



선을 다하겠다.

Q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고 실직한 여성이 사회보장제도에서 밀려나는 등 여성 근로자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 여성의 고용과 돌봄노동의 문제는 이제 국가 책임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코로나19 위기에서 대면서비스업 등 여성 종사자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하였고, 자녀돌봄 부담 가중으로 고용 충격이 남성보다는 여성에 더 집중되게 됐다.

여성의 노동 경력이 이어지도록 자녀돌봄에 대한 사회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령대 여성의 노동 공급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 중심의 현행 돌봄지원 정책을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에 대한 돌봄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여성의 이른 경력단절은 영구적인 인적자본의 손실로 이어져 코로나19의 위기가 끝난 후에도 경제 생산성과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정책 수립이 꼭 필요하다.

Q 예비 여성정치인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정치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지 않으면 많은 정책과 사회 변화가 그만큼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가정과 학교, 직장의 성 역할과 여성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차별이 계속되는 한 여성이 정치에 나설 가능성은 남성보다 여전히 낮을 것이다. 사회가 여성의 정치 진출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원인을 찾아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불의를 보고 투쟁을 멈추지 않는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 때문이 아니라, 현실의 작은 요구 때문이다. 우공이산이란 말처럼 우직하게 돌을 나르듯 한계 앞에서 무너지지 말길 바란다. 🍷

interview

황인자

- 한국여성의정 이사
- 제19대 국회의원



여성 고용과 미래세대 돌봄은 국가 경쟁력이다

이종배

제19-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충북 충주시)



Q 행정안전부 공직과 충주시장직을 거친 국회의원이다. 제도를 실행하는 행정부와 제도를 만드는 입법부의 차이가 있다면?

행정부와 입법부는 마차의 두 바퀴와 같다고 생각한다. 상호보완의 역할에 충실할 때 최상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40년 공직과 정치 생활에서 얻은 교훈이다. 국민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탁상공론'에 빠진 각종 규제다. 입법할 때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는 않나 하는 '현장의 눈높이'를 가장 염두에 둔다. 여론에 휩쓸리거나, 현장의 일부 목소리만 지나치게 반영되어 입법 충돌을 일으키는 법안이 양산되지 않도록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조율하고 있다.

Q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고, SNS 계정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하고 정비할 것인지?

아동보호 정책이 대책 간 상호 연계가 잘 안 되어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킨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우리 아이 지키기 5대 약속'을 발표했다. 아동학대 범죄는 조기 발견과

현장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신고 의무자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횡수에 상관없이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현장 대응 인력의 역량을 높이고 조사권을 주어야 하며,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을 별도 채용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우수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 관련 의료, 조사·법률, 상담·보호 등을 한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관련 예산도 통합하여 '아동학대방지기금'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 공소시효 폐지 등의 법 강화도 필요하다.

Q 지난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떤 부분이 더 개선되어야 할까?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는 일에 집중해왔다. 그 결실의 하나가 '스토킹 범죄처벌법' 제정이다. 지난해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해 지속 추진해왔고, 지난 3월 2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매년 증가하고 있는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스마트 안심 세트’(디지털비디오창, 문열림센서, 휴대용비상벨 등 방범장치)를 지원하고 112 긴급신고 앱과 연동되도록 하여 여성의 안전을 도모하겠다. 성범죄자가 인근 지역에 전입할 때 현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를 여성 1인 가구에도 확대하겠다.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의 일상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감독 기관의 인력도 확충하여 실효성을 높이도록 정부에 치안대책 강화를 촉구해 나가겠다.

Q 2021년 예산안을 보면 성인지예산이 작년 대비 3조 2,000억 원 더 늘어났지만, 정책연구, 인식개선 교육 등 사업에서는 정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권력형 성범죄와 N번방 사건 등은 잘못된 성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성범죄는 중대 범죄라는 사회 인식을 확산시키고,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체계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모든 공직자에게는 성인지 역량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런 활동을 위한 정부 예산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챙겨나가겠다.

Q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성평등이 퇴보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남성 일자리는 8만 2천 개 준 데 비해 여성의 일자리는 13만 7천 개나 줄어들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단축 근로나 유연근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육아기의 단축근무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경력단절 여성의 특화 직업훈련, 취업·창업 지

interview

이경숙

- 한국여성정책 사업단장
- 제17대 국회의원



원 강화 등으로 사회 복귀를 돕도록 해야 한다. 또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위해 아이돌보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일도 필요하다. 야간, 주말, 출퇴근의 돌봄 지원을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다. 여성의 고용과 돌봄 문제는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뿐 아니라 나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 당은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핵심 과제로 삼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Q 예비 여성정치인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0년 연속 포브스(Forbes)지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선정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위기 때마다 ‘무티(Mutti·엄마) 리더십’을 발휘해 독일 성장을 견인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실용적이고, 포용적이면서도 유연한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은 여성뿐 아니라 많은 예비 정치인들이 본받아야 할 표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예비 여성정치인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실 정치무대에서 보이지 않은 ‘유리천장’이 있더라도 그것을 없애도록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한다. 예비 정치인으로서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해나가면서 기회의 순간을 잘 포착하기 바란다. 🍷



죽어야 끝나는 강력범죄의 씨앗 스토킹범죄처벌법 22년 만에 제정



남인순

· 제19~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성폭력, 살인 등 다른 범죄피해의 사전 신호인 스토킹을 막을 수 있는 「스토킹범죄처벌법」이 22년만에 제정되어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3년 이하 징역, 흉기 소지 시 5년 이하 징역의 벌칙도 생겼다. 더이상 범칙금 10만 원에 불과한 경범죄가 아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은 제15대 국회(1999년)부터 발의되었는데, 필자 역시 제19·20·21대 국회에서 총 3차례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않았던 「스토킹범죄처벌법」이 2021년 3월 24일, 235인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은 스토킹범죄 피해 당사자의 끊임없는 목소리와 이를 지지해준 국민 덕분이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을 처음 발의한 당시에는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남성의 모습을 허용하고 미화하기까지 하던 성차별 문화가 남아있어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모자랐다. “열 번 짝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등 상대의 인격과 자기 결정권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애정을 요구해도 된다는 인식이 강했다.

시대가 변하며 별도의 「스토킹범죄처벌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예전보다 커졌음에도 「경범죄처벌법」이나 기존법 체계로 처벌 가능하다는 중론이었고, ‘스토킹’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어디까지 처벌할 것인지 논쟁거리라는 이유로 진척이 되지 않았다.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스토킹’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생활영역에 직·간접으로 접근하여 괴롭혀 신체와 정신의 피해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는 2019년 5,468건, 2020년도 4,515건이며, ‘데이트폭력 신고’는 2019년도 19,940건, 2020년은 18,945건이다.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8,982건 중, 폭행·상해 6,416건, 체포·감금·협박 898건, 살인(미수포함) 31건, 성폭력 51건 등 강력범죄로 진화하는 경우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¹⁾ 또한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성폭력 범죄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약 13배 높아졌다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다.²⁾

이렇듯 무고한 생명과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호소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7월 개최한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의 제목이 “죽어야 끝나는 스톱킹 범죄 미리 막을 수 없다”였다. 그 정도로 도움을 청할 수도 없어 피해자에게는 ‘죽어야만’ 끝나는 것이 스톱킹범죄였다. 토론회 당시 스톱킹 피해자인 조혜연 프로바둑기사가, 「스토킹범죄처벌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이 같은 피해는 반복될 것이라며 신속한 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2016년 송파에서 일어난 스톱킹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께서 사무실을 찾아오신 적이 있었다. 가해자는 3개월간 회사와 집 앞을 찾아오고, 휴대전화와 SNS를 통해 집요하게 연락하는 등 지속적인 스톱킹에 아버지가 직접 피해자의 출퇴근 길을 동행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죽은 신고한다 해도 경찰이 일일이 쫓아갈 수 없고 벌금 8만 원에 그친다는 것을 알고 아예 경찰의 도움도 요청하지 못했다고 한다. 소중한 딸을 잃은 피해자 부모님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며, “스토킹범죄처벌법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하셨다. 이런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굉장히 아프게 기억하고 있으며 제정을 위한 동력으로 삼았다. 이 법안이 조혜연 기사님과 송파구 부모님을 비롯한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란다.

20대 국회에서 법무부가 「스토킹범죄처벌법」을 입법예고 했으나 정부안을 발의하지 못했다. 이후 정부안을 내기 위해 정부 내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했으나, 발의가 점점 미뤄졌다. 2019·2020년에 이견 당사자인 법무부·경찰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법무부 장관께 친전을 보내고 국무조정실장과 면담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안 발의를 촉구해왔다. 결국 2020년 12월 정부안을 발의할 수 있었고, 이후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를 통해 2021년 3월에 통과될 수 있었다.

안인득 진주 방화살인사건, 창원 스톱킹 살해사건, 김

- 1) 스톱킹 112신고 코드는 '2018년 6월에 신설됐으나, 스톱킹 검거인원은 현재 별도 스톱킹범죄 처벌조항이 없어 산출불가함. 스톱킹과 유사·중복되는 데이트폭력 현황으로 추이를 살펴볼 수 있음.
-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9), 스톱킹 피해현황과 안전대책의 방향



태현 스톱킹 살해사건 등 너무 많은 죽음의 전조에 ‘스토킹’이 있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잘 집행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비록 아쉬운 부분도 있으나, 스톱킹범죄에 개입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것은 큰 진전이다. 신변 안전조치,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 불이익처우 금지 등 피해자보호제도는 별도법 제정이나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으로 보완할 것이다. 필자 또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으로 피해자보호를 더 강화하여 ‘스토킹범죄’의 근절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

스토킹범죄처벌법이 통과되기까지

- 2014. 12.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공동주최: 국회 성평등정책연구그룹(공동대표 남윤인순, 김상희 의원), 한국여성성전화
- 2016. 04.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단독 기자회견
- 2016. 08. 스톱킹 피해 실태 및 법적 대응 한일 심포지엄 개최
공동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교도여자대학교
- 2018. 02. 성평등 원내 정책조정회의 발원
“스토킹범죄를 형사 처벌하는 법안 처리 위해 정부와 야당의 협조가 필요”
- 2018. 02. 스톱킹·데이트폭력 당정간담회: 여성가족부·법무부·경찰청 참석
- 2019. 05.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발언
“살인의 전조 스톱킹, 스톱킹처벌특례법 제정 시급해”
- 2019. 07. 경찰청 보고 및 논의
- 2019. 07. 국회 대정부질문, 스톱킹범죄처벌법 제정 지연 문제 지적
박상기 법무부 장관 “스토킹처벌법 하반기 통과 최선 다할 것”
- 2019. 08.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 발원
“계속되는 희생, 스톱킹처벌특례법 제정해야”
- 2019. 08. 법무부 차관 보고 및 논의
- 2019. 11. 국무조정실장 보고 및 논의
- 2020. 07. 스톱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 개최 “죽어야 끝나는 스톱킹 범죄, 미리 막을 수 없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남인순·정춘숙
- 2020. 11. 법무부 장관에게 편지 전달

아동 학대와 성폭력, 여전히 부족한 법과 제도 정인이의 죽음은 또 생길 수 있다



신의진

-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
- 제19대 국회의원

1998년 대학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로 근무할 때 성폭력과 학대 피해 아동, 청소년을 진료하면서 아이와 가족을 위한 제대로 된 치료와 회복 지원 시스템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었던 기억이 난다.

이후 이들을 치료하면서 관련 법을 개정하고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같은 치료전담 기구도 만들면서 보람도 있었지만, 우리 사회의 경제력에 비해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너무 후진적이란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20년 넘는 세월 동안 제도는 조금씩 발전해왔지만 최근 진료 현장에서 직접 만난 학대, 성폭력 피해자를 보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프게 직면하고 있다. 최근에 마주친 두 사례를 살펴보면 참담한 우리 현실을 깨닫게 된다.

사례 1. 24세 여성, 아동 성폭력 관련 논문 보고 내원한 과학도

최근 남자 친구를 사귀다 공황장애 증상이 생긴 이후 잠을 못 자고 죽고 싶은 충동이 심해졌다고 함. 너무 증상이 심각해서 입원 치료를 시작했는데, 초등학교부터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왔고, 아버지가 아동학대 수준의 폭력과 욕설을 이 오빠에게 어릴 때부터 가해온 사실이 밝혀짐. 이후 친오빠의 사과, 부모의 태도 변화와 더불어 전문적 트라우마 완화 심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꾸준히 받아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울증이 재발하고 있음.

사례 2. 그룹홈에 거주하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예술심리치료와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정신의학 평가를 위해 만나게 됨. 6세 때 어머니가 어린 두 자녀를 남기고 떠난 이후 집안일을 전담하였고, 술만 먹으면 심하게 때리던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자랐음. 초등학교 6학년부턴 아버지가 성폭행을 시작하였으며, 중학교 입학 후 상담교사가 알게 되어, 아버지는 처벌을 받고 두 아이는 학대 아동을 위한 쉼터로 보

내짐. 초기 면담에서 만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장애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을 8개월간 시행하고 많이 개선됨.

위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숨겨진 아동 학대, 성폭력 사건이 많으며, 피해 사실은 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참 시간이 지난 후 드러난다. 발견 이후라도 전문적으로 회복 지원을 해주는 공적 시스템이 부족하며,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고통스러운 정신적 문제와 적응의 어려움을 평생 안고 살아간다는 점이다.

전문성과 효율적인 행정 절실

제19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동안 학대 피해자를 위한 통합된 효율적 지원체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관련 법부터 아동복지법과 성폭력특별법으로 분리되어 있고 국비 예산지원은 너무나 적는데 이마저 각기 부서가 따로 지원하고 있으니 큰 틀에서의 변화 없이는 제대로 된 대응이 불가능하였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모순과 비효율이 극심하게 뒤엉켜있으니, 정인이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국내의 체계적인 조사 결과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고도의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이 마련되어야 정인 이와 같은 죽음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다.

첫째, 신고 초기부터 수사와 아동보호를 위해 전문가의 개입을 허용하고, 행정 협조가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는 초동수사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역시 아동 발달과 학대 부모의 심리에 대해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 대응의 매뉴얼도 없이 사건을 대하고 있다. 그러니 자기 표현도 못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잘 다루지 못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2004년 발족한 여성가족부의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종합병원과 경찰관이 협력하여 진료와 심리평가, 수사 과정이 원스톱으로 진행되어 성폭력을 당한 아동과 가족을 체계적으로 돕고 있다. 이 제도를 학대 피해 아동

에도 적용하여 ‘권역별 아동폭력근절센터’ 형태로 운영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각 주무 부서인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이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서로 협력하여 한 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와 예산 운용 방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 적절한 아동 보호기관과 전문 치료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학대아동 보호기관은 바로 일반가정과 비슷한 형태를 갖춘 위탁가정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위탁가정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그룹홈과 같은 다수의 인원이 거주하는 보호시설에 맡겨지고 있다. 보호시설에 맡겨진 피해 아동은 분리된 초기에 불안과 공포가 심하므로 적절한 치료가 개입하는 시스템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지지하는 심리상담 정도가 아니라 의료전문의의 심리 진단에 따른 심리치료와 약물치료 등의 전문 치료가 특히 초기에 필요하므로, 가급적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가 자문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체질환이나 정서행동의 문제를 보이는 피해 아동도 양육할 수 있도록 특별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 위탁시설도 지역별로 운영하는 국가적 노력이 따라야 한다.

셋째, 원 가정 복귀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한다.

심한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원 부모로부터 분리시켜 아동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그러나 가정으로부터 아이들을 계획 없이 분리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은 복귀 프로그램의 개입 없이 장기간 보호시설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애착 대상의 부재로 정상적인 두뇌, 정서행동발달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해 부모가 처벌을 받고 나면, 전문가가 개입하여 면담을 주선하고, 부모 교육 등을 통해 제대로 아동을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원가정 복귀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 전문가의 치료 개입도 가능한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아동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출발점



백혜련

· 제20-21대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을)

정인이 사건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필자 또한 국회의원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서 정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정인아 미안해’라는 국민의 목소리와 국회의원이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준엄한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국회는 지난 1월 8일과 2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개정 내용

1월 8일 통과된 법률안은 무엇보다 정인이 사건에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정인이 사건에서 문제가 드러난 현장출동 및 응급조치 등 아동학대사건 대응 절차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주된 취지였다.

동 법안은 ①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조사·수사 착수를 의무화하고, ② 현장조사를 하는 인력이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 등을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③ 현행 응급조치기간 중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상한인 72시간 외 48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2월 26일 통과된 법률안은 ① 아동학대 범죄자가 아동을 살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고, ② 아동학대 범죄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의 선정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동 법안은 아동학대 살해범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책임을 고려하여 형법상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의 의미

정인이 사건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가슴이 아팠던 사안이다.

작년 5월과 6월, 9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의 심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경찰이 내사 종결·불기소 의견 송치 처분을 하는 등 부실 수사로 일관한 끝에 안타까운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정인이의 작은 몸에 남겨진 상처들에 대한 전문가 대다수의 소견, 그리고 주변 지인의 증언과 CCTV 등을 통해 정인이를 잔혹하게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이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피의자인 양모는 아직까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어 국민적인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정인이 사건과 같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아동학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가 바로 이번 개정안이었다.

그동안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효성이 우려되어 오던 아동학대처벌법이었지만, 여야가 당파를 초월하여 한 마음으로 마련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우리의 아동보호 제도에 ‘작지만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 법의 개정 동향

1월 8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과 함께, 민사에 관하여 일반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민법」도 개정되었다. 친권자가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던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이로써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63년 동안 법으로 허용되어 오던 부모의 징계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우리 아동복지 체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아

동복지법」도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아동학대범죄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그 처벌과 절차 등을 다룬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아동복지 체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개정 이후의 과제

2003년 우리와 유사하게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빅토리아 클림비(Victoria Climbié) 사건-이 발생한 영국은 2년간 약 6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클림비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영국 의회는 400여쪽 분량의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아동법을 전부 개정하여 아동보호 체계의 일대 혁신을 이끌어 냈다.

우리 아동보호 체계도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법 개정 이후에도 아동학대 전담 인력의 증원 과 전문 교육 강화, 예산 확충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고 의무자인 시민의 성숙한 인식, 입양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지방자치단체·응급의료기관 등 유관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그리고 아동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체계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아동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 아동보호 체계를 되돌아 살펴보고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1998년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린 영혼이 남매 사건,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칠곡 계모 사건과 2020년 정인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소중한 아이들이 고통받다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스포츠계 여성의 위상 세우기 우리천장 깨기와 인권 회복은 같다



임오경

- 제21대 국회의원 (경기 광명시갑)
- 전 서울시청 핸드볼팀 감독

“여자가 저 혼자이기 때문에 좀 섭섭해요. 압흐로는 이런 대회에 우리 조선 여성도 만히 참가하도록 해주기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조선여성을 대표해야 아니 전조선민족을 대표해야 나가느니 만큼 조선사람도 이리타는 것을 뽐내도록 힘을 다할 작정이요...” (동아일보 1948년 6월 20일자 기사)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 만든 여성 체육인 역사

‘처녀의사 유관순 양을 길러낸 이화여자중학의 또 하나의 보배이며 조선 체육의 자랑인 동교 5학년생 박봉식 양’이 1948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선수로서 제14회 런던올림픽에 출전한 이래 그녀의 후배들은 눈부신 활약을 이어왔다.

1967년 체코에서 열린 세계여자농구선수권 대회에서는 신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강호들을 격파하며 준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1973년 유고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는 우리나라 여자탁구가 구기 사상 최초로 세계 정상에 올랐다.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서 여자배구가 여성 첫 올림픽 메달을 획득했을 무렵 우리나라 스포츠에 대해서 외국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평가하였다고 한다. “여자가 남자보다 낫고, 올림픽은 꿈도 못 꾸고 금메달은 30년에 한 개 딸 정도 수준이다.”

그로부터 10년이 채 되지 않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부터 양궁 종목을 필두로 ‘남자보다 낫다’는 여성 체육인은 그때의 흑평을 비웃듯 맹활약을 하였고, 대한민국 체육의 위상을 세계 10위권으로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2000년대 들어 스포츠가 본격적으로 대중화, 산업화하며 여성 스포츠도 남자와 똑같이 경쟁하고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학교 체육을 통해 여성 스포츠가 대중화하기 시작했으며 2012년 런던올림픽부터는 전 종목에 여자 경기가 들어가고 참가 선수의 46%가 여성 선수다. 또한 생활체육 분야에서의 여성의 참여도 증가하여 2018년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서는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은 62.8%로 사상 처음 남성(61.6%)을 추월한 것

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여성체육인, 현재의 위상은?

박봉식의 올림픽 출전 이후 73년간 우리나라의 스포츠 역량은 질적·양적인 측면 모두 비약의 성장을 거듭했지만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계 여성의 위상은 이러한 성장세에 부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얼마 전 대한축구협회 창립 88년 만에 최초의 여성 부회장과 임원진이 탄생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이를 보편의 상황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019년 대한체육회 조사에 따르면 등록된 체육지도자 중 여성 지도자는 17.9%에 불과하며 여성 특화 종목을 제외하면 여성 지도자의 비율은 더 낮아진다. 체육단체의 여성 임원 비율은 더 낮고(대한체육회 13.7%, 시·도체육회 11.4%), 특정 종목의 경우 여성 선수의 비중은 40%에 가깝지만 대학생 이상 성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자 비중은 0%인 종목도 있는 등 여성 체육인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공고하기만 하다.

유리천장의 문제뿐 아니라 인권 문제에서도 여성 체육인은 대부분 피해자 입장이었다. 체육계 미투 등 성폭력 이슈가 한창 드러나던 지난 2018~2019년 무렵 국회에서는 최근 10년 이래 가장 많은 체육계 성폭력 근절 법안이 발의되었다. 가해자에게는 불이익을, 피해자에게 지원을 강화하고 '엘리트 체육 시스템'을 포함한 체육계 병폐 해소 방안들이 담겼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채 해결되기도 전, 이번에는 고 최속현 선수 사건 등 폭력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이러한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 폭력 등의 여성 피해자는 침묵하거나 피해를 폭로한 뒤 체육계를 떠나야 했다.

행동하는 2%가 행동하지 않는 98%를 지배한다

여성 체육계의 해묵은 현안인 유리천장 극복과 인권 문제 해결은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상호연관된 문제로 그 전제조건과 해법이 같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체육인 스스로 문제의식과 해결 의지를 가지고 전면에서 나서야 한다.

'행동하는 2%가 행동하지 않는 98%를 지배한다'는 말처럼 여성 체육인이 하나된 마음으로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 체육인의 권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이익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성 체육학회, 100인의 여성 체육인 등 우리나라 여성 체육계를 이끌어가는 여성 체육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해 본다.

여성 체육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해법의 첫째는 제도화이다. 경영학에서의 제도화 이론(Institution Theory)에 따르면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다소 합리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제도라도 갖추어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그 효과가 나타나고 결국 조직의 생존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한다.

여성 지도자를 늘리기 위해 여성 스포츠 종목에 여성 지도자 비율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여성 체육인이 스스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 스포츠 조직에서 여성분과·여성위원회를 없애는 것, 육아의 경력단절 극복을 위해 경기장에서 아이돌보미를 활용하는 제도적 뒷받침, 성폭력, 폭력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이러한 많은 아이디어를 제도화하여 초기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점진적 안정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제도화를 위해서는 여성 체육인 출신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1·2호 법안으로 전문 체육인과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체육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고 최속현 선수 사건 청문회를 통한 진상규명과 체육계 인권 기준을 강화하였다. 앞으로 여성 체육인의 미래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실행을 이루어나가겠다. 🌸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의 다짐

스포츠 현장, 그 경쟁의 최전선에서 팀을 이끌며 리더십과 승부사 기질을 발휘하여 정상에 올랐던 나는 스포츠보다 더 치열한 현실정치에 뛰어들어 그 어느 때보다 숨 가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1·2호 법안으로 전문 체육인과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체육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고 최속현 선수 사건 청문회를 통한 진상규명과 체육계 인권 기준을 강화하였다. 앞으로 여성 체육인의 미래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실행을 이루어나가겠다. 🌸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성가족부 20년



양성희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 1월 출범 20년을 맞은 여성가족부는 그간 부침이 심했다.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탄생해, 2005년 여성가족부(노무현 정부)로 확대됐다가 2008년 여성부로 축소(이명박 정부), 2010년 다시 여가부가 됐다. 이때 복지부로부터 가족 업무를 이관받으며 핵심인 보육을 제외한 틈새 업무만 넘겨받은 게 오늘의 여가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20살 여가부, 사람으로 치면 성인식을 치르는 셈이지만 마냥 축하받을 상황은 아니다. 인력, 규모, 예산에서 여전히 힘없는 부처고 특하면 ‘여가부 해체’를 외치는 반대 세력이 있다. 무엇보다 권력형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젠더 갈등과 저출산, 아동학대 등 술한 ‘여성’, ‘가족’ 이슈가 터져 나오는데 주무 부처가 안 보인다는 비판이 많다.

최근에는 젊은 여성 사이에서도 여가부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 페미니즘 리부트를 주도하며 기존 여성운동계와도 각을 세우는 2030 영 페미니스트들은 ‘이럴 거면 여가부가 왜 있냐며 ‘여가부 무용론’에 손을 든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이 성인남녀 99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여가부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72.3%에 달했다. 부정 평가가 남성(71.4%)보다 여성(74.3%)에서 높았다.

일하는 여가부로 체질 개선이 시급

“20년 전 세계 언론과 해외 페미니스트들은 경제 기적과 정치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성평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를 설립한 것을 극찬했다. …(그 후) 여가부가 적은 예산으로 힘들게 버티는 동안 세상은 그 부처에 또 다른 엄청난 과제들을 안겼다.”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의 지적이다. 제대로 일하는 여가부를 위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 리셋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도 여가부는 최하위였다. 여가부의 고위 간부를 지낸 한 인사는 여가부의 내부 정서를 ‘매 맞는 아내 증후군’에 비유했다. “힘도 없고, 만날 여기저기서 얻어맞다 보니 자포자기 무력감만 팽배해 있다”는 설명이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업무 강도는

높지 않으니 편안한 부처” “세종 아닌 서울에 있다는 게 큰 강점”이라는 식의 냉소가 퍼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가부 무용론은 지난해 이정옥 여가부 장관 때 극에 달했다. ‘여가부 폐지’ 청와대 국민 청원에 10만 명 이상 동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성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사로 깜짝 발탁된 이 전 장관은 여가부의 시계를 한참이나 되돌리는 퇴행적 행보를 보였다. 특히 전임시장들의 성폭력으로 치르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대해 “국민이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 학습할 기회”라는 망언으로, 여가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여가부의 위상을 상징해 보여준다.

물론 여가부 무용론의 핵심은 장관 1인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 여가부는 돈도, 인력도, 권한도 적은 미니 부처다. 2021년 예산이 1조2325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2% 수준. 서울 강남구 한 해 예산(1조1278억 원) 정도다. 인원도 267명밖에 안 된다.

‘여성’하고도 ‘가족’부니 웬만한 사회 갈등과 국민의 관심사를 다 다루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타 부처와 업무가 겹치고 권한도 적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아동·저출산·돌봄은 보건복지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법무부·경찰청, 청소년 정책은 교육부와 업무가 겹친다. 보육·입양은 복지부, 성별 임금 격차 고용 문제는 노동부, 성폭력은 경찰청·법무부 관할이다.

성폭력 사건 조사권 같은 실질 권한도 지자체에 위임돼 있다. 여가부 예산 60%를 차지하는 가족 업무는 주로 미혼모·한부모·다문화가정 지원에 치우쳐 있다. 2020년 저출산 예산도 복지부는 30%, 여가부는 2.5%로 노동부 8%보다도 적었다. 실권이 없으니 여러 부처에 흩어진 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은 더욱 힘들다. 한마디로 정책기획 업무만 할 수 있는데 권한 없이 책임만 지라는 부처, 다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는 부처다.

위상 강화와 업무 효율화를 위한 조직 개편 필요

이처럼 제대로 일할 여건을 만들어놓지 않고 사회적

갈등이 터지면 여가부가 제 역할 못 한다고 ‘욕받이’로 내세워온 게 현실이다. 위상 강화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한 이유다. 우선 성평등은 특정 부처의 전유물이 아니고 국가 통치원리가 돼야 하는 만큼, 모든 정부 정책에 성평등 기조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국무회의에서 말발 안서는 작은 부처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성평등 이슈를 챙기고 성인지 정책을 펴야 한다. 부처 간 칸막이 지워진 여성·아동·가족 업무를 한데 모아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부처 이기주의의 극복이 과제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가부는 실무적 행정기관으로 두자”고 제안했다. 반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가부는 아동청소년가족부, 혹은 아동청소년부로 재편하자”(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제안도 있다. “여성을 가족에 묶어두고 특정 성별을 앞세운 부처 이름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협소한 논의를 벗어나, 전 생애 관점에서 모든 사람을 아우르자는” 취지다. 현재 여가부의 영어명칭도 ‘성평등 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다. 반면 아직은 정부 부처의 공식명칭에서 ‘여성’을 뺀 단계는 아니라는 현실론도 있다. 성평등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청와대의 적극적인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덧붙여 아직도 해외에는 여가부 같은 여성 정책 부서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사실은 다르다. 2020년 5월 기준 여성·성평등 장관급 부처가 있는 나라는 영국·캐나다(여성·성평등부), 독일(가족노인여성청년부), 스웨덴(성평등부), 이탈리아(평등가족부) 등 97개국이다. 미국(세계여성이슈사무소), 프랑스(총리 직속 양성평등 사무국), 일본(내각 소속 성평등국), 중국(국무원 부녀아동업무위원회) 등은 장관급 이하 여성·성평등 부처·기구를 두고 있다. 🌸

보호무역과 팬데믹, 세계를 구하라 첫 흑인여성 WTO 사무총장의 도전



이윤정

·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

세계무역기구(WTO)의 첫 흑인·여성 사무총장, 응고지 오크조이웨알라

한국에서 그의 이름은 낯설다. 지난해 10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투표 결선에서 아프리카 후보와 맞붙는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전까지 오크조이웨알라를 아는 이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나이지리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며 입지를 쌓아왔다. 경제 전문가로 25년간 세계은행에서 근무했고 나이지리아에서는 두 번이나 재무장관을 맡아 나라 살림을 책임졌다. 특히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역임한 최초의 여성이었고, 두 명의 대통령 밑에서 근무한 유일한 재무장관이기도 하다. 그의 타이틀 앞에는 항상 ‘최초’가 따라붙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습관

그는 나이지리아 왕족 집안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자녀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오크조이웨알라 사무총장도 나이지리아의 일류 학교를 졸업한 뒤 1973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미국에서 신경외과 의사 남편을 만났다. 이후 네 자녀를 키우면서도 오크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가 걸어온 길이 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겉으로 보기에 극복할 가능성이 없는 일에 도전하는 것이 오크조이웨알라의 습관이 됐다”고 평했다.

오크조이웨알라 사무총장도 처음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직을 수락했을 때 “최악의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2003년 세계은행을 떠나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에 올랐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다. 국가는 빚더미에 빠져 있었고, 국민 여론도 심하게 분열된 상태였다. 수십 년간 이어진 군사 정권은 정부 곳곳을 마비시켜 놓았는데 공무원들의 부정도 극에 달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재무장관으로 재임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00억 달러의 국가 부채를 탕감하며 불가능해 보이던 도전을 완수했다. 이후 2007년부터 다시 세계은행에서 일하다가 2011년 나이지리아로 돌아와 다시 한번 재무장관직을 수행했다. 오크조이웨알라는 공공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고 주택 금융 사업을 활성화했다. 또 여성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해 수천 개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했다. 오콘조이웨알라의 획기적인 정책 덕에 나이지리아는 2013년 아프리카에서 국내총생산(GDP) 1위 국으로 떠올랐다. 24년 만이었다.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다면

또다시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침예한 도전에 직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주의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WTO를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 WTO가 헤쳐나가야 할 문제는 많다. 팬데믹으로 세계의 무역과 경제 활동이 움츠러들었고,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들었다. 개발도상국들이 겨우 일군 수십 년간의 성장 시계도 멈췄다.

당장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문제가 WTO의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WTO에 지식재산권 협정(TRIPS) 관련 조항의 일시적 면제를 통해 전 세계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때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특허 문제없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경없는의사회'도 코로나19 백신을 공공재로 봐야 한다며 백신 지적 재산권·특허 면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초기에 성공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반대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일단 중립을 지키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까지 글로벌 백신 연합인 가비(Gavi) 이사회 의장을 지낸 만큼 백신 개발과 배포 문제에서도 전문가적 견해를 갖고 있다. 그는 중립을 지키면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초국적 제약사들이 개도국에 기술 이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인도의 백신 제조사 세룸인스티튜트(SII)와 맺은 계약처럼 초국적 제약사들이 기술을 이전해 더 많은 백신을 생산하도록 하지는 것이다. 알자지라는 “특허권 면제보다는 개도국의 제조업체들에 더 많은 라이선스를 부여하도록 압박해 ‘합의점’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전 미국 정부 당시 기능이 정지된 WTO의 분쟁해결기구(DSB)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 DSB 상소



위원은 WTO에 제소된 국가 간 무역분쟁의 최종심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인데,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반대로 총 7명으로 이뤄진 상소위원 자리에 단 1명도 충원되지 못하면서 DSB 기능이 마비됐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상소위원 선임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WTO 개혁 방안에서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이견이 컸지만,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이 중재하며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또 그는 미중 무역전쟁 등 최근 각국의 통상 분쟁 해결에 고전하고 있는 WTO의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 그는 최근 CNN 인터뷰에서 “실례는 동시에 부담이 된다. WTO를 재브랜딩하고 기관의 입장을 재정립하려면 큰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때 WTO는 일부 부유한 회원국들의 ‘슈퍼 비서’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파스칼 라미 전 WTO 사무총장은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이 WTO를 강대국의 비서가 아닌, 균형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콘조이웨알라 총장은 그 시작점을 ‘신뢰 회복’으로 꼽았다.

그는 취임 첫날 FT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밝혔다. “WTO는 그 어느 때보다 침예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다면 위기를 헤쳐나갈 희망이 있습니다.” 🍷

의회학과 1호 석사 논문 「여성의원 증가에 따른 의회 생산성 변화연구」



강한옥

· 서울시동작구의회
6-8대의원

2006년 정당공천제와 중선거제 도입과 현재까지의 여러 정치 제도의 변화로 기초의회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 여성의원 수가 증가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2010년 지방선거부터 여성의원 의무공천 할당제로 지역구의 여성의원도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성의원 공천 할당제가 권고 사항이었기에 여전히 여성의원 수가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할 만큼의 수적 증가는 아니었다. 적은 여성의원 수에도 불구하고 여성의원은 의정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펼쳐 나갔다. 생활정치, 풀뿌리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 속에서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은 구민을 직접 만나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하며 정치가 나의 삶 속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특히 여성의원의 꼼꼼함과 친근감으로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며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정치활동은 남성의원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되며 보육, 교육, 가사노동, 어르신 돌봄 등의 사회 문제가 커지면서 여성의원은 여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책개발과 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정책 결정의 남녀비율의 불균형을 해결해 나가기도 했다. 더불어 특정 계층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 민주주의를 여성의원 수의 증가로 해결해 나가기도 했다.

역량 강화의 정규과정교육 기회를 얻다

나 또한 2010년 여성의원 공천 할당제로 의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여성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올바른 의정활동이란 어떤 것인지 바른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지식은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하였다. 처음 의정활동을 위한 교육은 대부분 의회에서 마치 대학교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전부였고 의회의 역할인 예산심의,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일회성 교육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며 의원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심화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2019년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가 신설되어 기초의원은 전문적인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위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매우 기뻐다. 게다가 한국여성의정에서는 중앙대학교와 협력하여 여성 정치인의 역량강화와 경력지속을 위한

지원으로 장학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의정활동을 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원에게는 교육과 장학금이란 일석이조의 큰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각 지역의 여성의원으로 구성된 의회학과는 정당을 초월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각각의 지방자치의 특성을 공유하며 지방자치 분권과 여성정치 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연대의 확고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열의 넘치는 여성의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을 확인하며 학위논문의 주제를 ‘여성의원 증가에 따른 의회 생산성 변화연구’로 하여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 변화를 확인하고자 했다.

역량 있는 여성 의원 증가여야 의회 생산성이 높아진다

먼저 여성의원 증가에 따른 의회 구성변화를 살펴본 결과 6대 여성의원 119명으로 28%이고 7대는 여성의원 139명으로 33%를 차지했으며 8대는 여성의원 168명으로 39%로 증가했다. 선수별로 정리해보면 6대 3선 이상의 여성 의원은 4명 7대 3선 이상의 여성 의원은 15명으로 늘었고 8대 3선 이상의 여성 의원은 27명이었다. 의장단 구성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6대 여성 의장은 전후반기를 합쳐 4명이었고 7대는 8명, 8대는 13명으로 의장단 구성에서도 경력이 지속되고 있는 여성의원들의 진출이 눈에 띄었다.

논문 연구를 위해 여성의원 숫자가 많이 늘어난 서울시 25개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여성의원 비율이 급증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2018년 전반기를 중심으로 여성의원 증가와 의회 생산성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초의회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인 조례 발의건수, 구정질문 참여횟수, 5분발언 참여횟수를 지표로 설정하고 남성의원과 여성의원 간 각 의회 생산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여성의원들의 숫자의 증가와 기초의회 생산성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성의원 비율이 높은 의회와 여성의원 비율이 낮은 의회를 비교분석 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의원 생산성이 높은 의회 순위별로 여성의원 비율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기초의회의 조례발의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의원 개별 발의 건수는 성별이 아닌 의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정질문 참여횟수와 5분발언 참여횟수도 여성의원 비율이 높은 의회에서 여성의원들이 일관되게 높은 참여횟수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율이 낮은 의회에서 특정 여성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나타났다. 여성의원들의 의회생산성이 높은 의회의 경우 모든 여성의원들의 활동이 아닌 특정 여성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여성의원들의 전체 의회생산성 평균이 높았다. 즉 기초의회에서 여성의원들의 증가가 모든 여성의원들의 적극적 의정활동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며, 의회 생산성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성별보다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의원 숫자가 증가한다고 저절로 의회 생산성이 증가하기보다는 역량 있는 여성의원들의 증가가 의회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원 증가에 따른 선행연구에서는 전체 평균을 통해 의회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원 수 증가가 의회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본 논문의 특징은 전체 평균이 아닌 개개인의 의정 생산성을 분석하고 평균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본 것에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기초의회에서 여성의원 비율 증가가 직접적으로 여성의원들의 의회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며, 또한 기초의회의 의회 생산성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반면 여성의원 비율이 높은 의회는 남녀의원 모두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증가하는 여성의원 숫자가 기존 남성의원과 기존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 경쟁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여성의원 증가가 남녀의원의 상대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의 자극제가 되었을 것으로 추론한다. 여성의원 증가는 여성 과소 대표성 확보를 위해, 정책결정 권한에 남녀불평등 해소를 위해, 특정 계층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현실 민주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능력 있고 역량 있는 여성의원들의 증가로 의회 생산성을 높이고 더불어 여성의원들의 경력이 지속되길 희망한다. ♀



사진 글 정의화
(전 국회의장)

2009년 6월 16일 이른 새벽, 안동 하회마을 입구에서 운무가 깔린 강둑을 따라 걷다가 만난 만송정으로, 사진작가답게 3kg무게의 200mm 망원렌즈를 장착한 캐논 Mark5 카메라를 들고 있었기에 얻은 작품이다. 하회마을 만송정은 서애 류성룡의 가형 겸암선생이 북서쪽의 허한 기운을 막고자 심은 1만 그루의 소나무이다. 지금의 소나무는 1906년에 다시 심은 것이라고 한다. 국가민속문화재인 하회마을과 마을을 휘감고 도는 낙동강, 강변 따라 펼쳐진 넓은 모래 퇴적층에 있는 만송정의 조화가 어우러지는 자연풍광이 아름답다. 새벽 일출의 빛을 머금은 소나무 숲과 잡풀, 낙동강의 운무가 조화를 이룬 작품으로 국회의장 재임 중 집무실에 걸어두었고, 신년에 귀한 분들에게 보내는 인사장으로 활용하기도 했었다.





한 여성의 삶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일에 관하여 『보부아르, 여성의 탄생』



최현지

· 여성신문 문화부 기자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페미니스트 사상가, 20세기 여성 해방 운동의 선구자. 시몬 드 보부아르를 수식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이다. 웅대하고 근사하다. 그러나 대표적인 수식어를 지닌 사람일수록 자칫 납작하게 이해되기 쉽다.

500쪽이 훌쩍 넘는 『보부아르, 여성의 탄생』을 쓴 케이트 커크패트릭 옥스퍼드대학 철학과 교수는 “보부아르의 인간됨을 모든 면에서 보여주고 싶었다”고 집필의 포부를 밝힌다. (서문의 제목은 ‘우리는 보부아르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다.)

보부아르가 공개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끌어내다

커크패트릭에 따르면 보부아르는 “페미니스트 아이콘, 포스트 페미니즘 소비재, 즉 ‘자기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이자 브랜드가 된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삶이 윤리적 기치로서의 페미니즘을 매 순간 성실히 따르는 단선적인 삶이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을 보여준다. 한 인간으로서의 보부아르, 즉 자신의 과거의 인질이자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인, 그리고 욕망을 내밀하게 드러내거나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는 그의 다면적인 삶에 관하여 커크패트릭은 그를 대신해 차근히 정리한다.

커크패트릭은 또 이 책을 “보부아르가 공개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끌어내려는 전기”라고 자평하기도 한다. 이를 다

르게 말하면 특정한 ‘프레임’ 안에 보부아르를 가두지 않고, 일기나 편지와 같은 그의 내밀한 기록을 중심으로 그의 삶을 시간순으로 차근히 되짚어가겠다는 각오다.

보부아르의 대표작이자 지금까지도 수없이 인용되는 페미니즘의 고전으로 알려진 『제2의 성』은 프랑스 여성이 투표권을 얻은 지 4년밖에 안 됐던 해인 1949년 출간됐다. 이 책은 당시 가부장적인 프랑스 사회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참정권 획득 이후 ‘이제 여성은 무엇을 바라고 요구할 것인가?’를 두고 변화의 갈림길에 선 서구 여성주의 운동에 새로운 전망을 제시한 혁명적인 저서로 평가된다. 여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gender)을 구분하는 현대 페미니즘 철학의 초석을 세운 것이 보부아르였다.

『제2의 성』은 그간 금기시됐던 여성의 솔직한 경험을 다룬 전례 없는 저작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케이트 밀릿, 술라마스 파이어스톤, 베티 프리던 등 후대 페미니스트들은 이 책에 힘입어 1960년대 성 혁명을 일으켰다. 보부아르를 통해 많은 여성은 아내나 어머니로 살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꿈꿀 수 있었다.

여기서 ‘(여성)이 되어가다(becoming)’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부아르가 평생의 저작을 통해 강조

하고자 했던 핵심 중 하나는 인간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동일한 자기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실존주의 철학자이기도 했던 보부아르에게 자기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변해 가는 타인들과 더불어 불가역적인 '되기(becoming)'의 과정을 거치는 일이다. 많은 이들이 구호로서 차용한 유명한 문장도 있지 않은가.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따라서 '되기'의 개념은 보부아르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보부아르가 평생을 ‘철학하는 삶’, 즉 사유하고 고민하며 질문하는 지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삶에는 페미니즘과 사회운동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욕망이 자리했다. 보부아르의 삶을 통틀어 가장 유명한 관계는 아마도 장 폴 사르트르와의 ‘자유계약적인’ 연애 관계일 텐데, 둘은 실제로 서로를 가장 중요한 상대로 여기며 자유로운 연애를 허용하는 계약을 맺었고, 51년 동안 삶과 사유의 동지로 함께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보부아르는 자신의 업적보다 사르트르와의 관계로 더 기억되어 왔다.

커크패트릭은 연구 과정에서 우선 사람들이 사르트르를 기억하는 방식과 보부아르를 기억하는 방식에 비대칭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르트르는 독자적인 저작과 철학으로 더 널리 알려진 반면 보부아르는 사르트르와의 관계 안에서 소비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커크패트릭의 또 다른 문제의식은 보부아르의 욕망에 관한 지점이다. 보부아르 사후에 알려진 바로는 보부아르에게 사르트르 외에도 사랑을 나눈 여러 인물이 있었다. 보부아르의 공적인 페르소나는 자신이 쓴 글과 다른 인물의 시선으로 규정됐지만, 그가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은 일기나 편지 등을 통해 그에게는 비밀스러운 연애, 끝내 마음에 품은 사랑, 사르



르트르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이 있었다. 몇몇 파트너는 보부아르의 제자였고, 연애 상대 중에는 여성도 있었다. 보부아르를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상상해온 이들에게는 충격적인 폭로였겠지만, 그 모순은 보부아르가 '되어간' 과정의 당연한 일부였다.

보부아르의 내밀한 삶이 궁금한 모든 이에게 권함

한 여성 안에 무수히 많은 자아와 면모가 깃들여 있음을 인지하고, 그 뒤얽히고 교차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욕망과 모순을 꺼내 보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 페미니즘적이다. 불가피하게 편협한 잣대를 적용해 한 사람의 삶을 멋대로 재단하고 쉽게 비난하는 태도는 또 다른 대상화이며, 페미니즘은 궁극적으로 모든 차별 철폐와 더불어 대상화된 시선을 거둔 자유롭고 평등한 시선을 견지하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위대하다고 칭송받는 인물을 포함해 우리는 모두 사상적 일관성을 삶의 모든 순간에 투철하게 적용하며 살아가지 않는다. 특히나 지금껏 우리는 수많은 여성의 삶을 두고 남성과의 독점적 관계에, 혹은 드라마틱한 사건에 분석의 초점을 맞춰오지 않았던가. 보부아르의 삶과 사상을 다룬 이 전기는 결국 보부아르가 어떻게 '되어갔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변화무쌍하다.

588쪽에 달하는 묵직한 양장본을 천천히, 한 장씩, 끝까지 넘겨보고 나서야 겨우 알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란, 그토록 많은 기록을 남긴 시몬 드 보부아르 같은 여성이더라도, 그 삶을 결코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보부아르의 공적이 내밀한 삶의 진정한 면면이 궁금한 모든 이들에게 권한다. 이 책을 통해 반드시 보부아르의 일면을 새로이 접하게 될 것이고, 그 발견은 결국 그와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독자에게도 힘을 줄 것이다. 누구나의 인생이 그러하듯이. 🍷



여성의 독심을 닮은 영화, 미나리

윤여정의 순자와 한예리의 모니카



강푸름

· 퍼플레이 콘텐츠팀 에디터

미나리? <미나리>(2021)의 제목을 듣고 머릿속엔 물음표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우리가 아는 그 식물?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의아함이 컸던 건 <미나리>가 국내 영화가 아니라 해외 작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영화 제목에서 한국 식물의 이름을 보게 될 줄이야. 쉽게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이민 가족의 이야기

영화는 한국계 미국인 정이삭(리 아이작 정) 감독의 유년 시절이 바탕이 되었다. 19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건너간 제이콥(스티븐 연)과 모니카(한예리)는 캘리포니아에서 병아리 암수를 감별하며 생계를 유지하다 아칸소주라는 외딴 시골로 이동해 온다.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삶에 모니카는 아칸소에서 시작을 거부하지만 제이콥은 완강하다. '내 땅'을 일궈 농사로 성공해보겠다는 꿈을 저버릴 생각이 하나도 없다. 폭풍우 치는 날 밤, 고성이가 오가는 싸움 끝에 들은 결국 합의를 본다. 제이콥이 농사를 짓는 대신 모니카는 한국에 있는 어머니를 모셔오기로. 그 결과 순자(윤여정)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머나먼 미국 땅으로 날아온다. 고춧가루, 멸치, 밤, 한약 그리고 미나리 씨를 싸 들고.

순자의 합류 이후 영화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밭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제이콥, 허덕이는 가게 상황이 불안하지만 가정을 지키려 최선을 다하는 모니카, 처음 보는 한국인 할머니가 너무 낯선 데이빗, 엄마를 도우며 동생을 챙기는 앤, '할머니 같지 않은 할머니' 순자. <미나리>는 낯선 땅에 뿌리 내리고자 고군분투하는 한 공동체 이야기를 풀어 놓으며 구체성과 보편성을 얻고, 그럼으로써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가족이란 무엇인가' 되돌아보게 만든다. 이처럼 세대, 인종을 불문하고 많은 이가 영화에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적인 스토리와 디테일한 설정, 배우들의 밀도 높은 연기가 찰떡궁합을 이뤘기 때문이다.

한예리의 모니카에 대해 말하고 싶다

〈미나리〉는 지난해 선댄스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시작으로 100여 개 이상의 트로피를 받으며 기록적인 수상을 이어왔다. 그중에서 배우 윤여정이 받은 연기상만 40여 개에 달한다. 미국배우조합상(SAG), 영국 아카데미상 등에서 여우조연상을 휩쓴 그는 제 93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까지 손에 거머쥐었다. 한국 배우로는 최초이며, 아시아 배우로는 두 번째다. 매일 새롭게 쓰이는 한국영화사의 한 페이지를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것은 실로 짜릿하고 흥분됐다.

순자로 열연하여 오스카 트로피까지 거머쥔 윤여정 배우의 이야기도 흥미롭겠지만, 이 영화를 처음 접한 순간 나의 시선을 사로잡은 캐릭터는 한예리가 보여준 모니카였다. 영화를 보며 어떤 캐릭터에 자신을 이입할 것이냐는 개인의 성장 배경, 교육 환경, 정치 성향에 따라 나뉠 것이다. 〈미나리〉는 그 차이를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제이콥을 연기한 스티븐 연은 “미나리를 찍으며 비로소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다. 누군가는 그의 말마따나 영화를 통해 그 시절 아버지에 대한 동감과 이해를 경험했을 수 있다. 또 누군가는 데이빗의 감정선을 따라 영화를 감상했을 것이고, 또 다른 이는 앤을 보며 장녀가 갖는 책임감을 새삼 떠올렸을 것이며, 다른 누군가는 순자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수도 있다. 나의 눈에는 모니카가 들어왔다. 30대 여성이자 누군가의 딸과 아내, 엄마의 역할을 균건히 해내야 했던 사람.



한예리의 세심한 연기는 ‘지영(앤의 한글 이름) 엄마’를 리얼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모니카라는 인물을 한층 매력적으로 구축해냈다. 모니카의 구체적인 전사를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쳐 왔는지 상상해볼 수 있는 것은 탄탄한 시나리오뿐 아니라 한예리라는 배우가 가진 기량 덕분이기도 하다. 순자가 가져온 고춧가루를 감탄에 찬 눈빛으로 찍어 먹을 때, 데이빗을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며 불을 끄 집을 때, 바닥에 주저앉아 앤과 대화를 나누며 턱을 쓸고 무릎을 어루만질 때, 제이콥의 머리를 감겨주다 말없이 그를 바라볼 때. 한예리의 눈빛과 손짓, 걸음걸이, 목소리는 관객의 눈과 귀를 붙잡고 모니카가 어떤 사람인지 구석구석 훑어보게 만든다.

영화가 시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등장하는 그의 얼굴은 상황이 썩 유쾌하지 않음을 알려준다. 생명이 태동하듯 녹음 가득한 아름다운 풍경을 모니카는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고, 차를 모는 표정에선 물음이 하나 읽힌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목적지도 삶의 방향도 알 수 없는 상황에 불안함이 역력하다. 앞서가던 제이콥의 차가 멈춘 곳엔 트레일러 하우스가 덩그러니 서 있다. 주위에 보이는 것이라곤 드넓은 땅, 풀과 나무, 바퀴 달린 집. 신기하게 생긴 집에 아이들은 그저 해맑지만, 모니카의 안에선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다. 허탈한 웃음조차 짓지 못하는 그 심정은 어땠을까.

“결혼하면서 했던 말 기억나? 미국에 가서 서로를 구해주자고 했던 거.” 제이콥의 말처럼 서로를 구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던 둘이다. 그러나 삶은 녹록지 않았고 먹여살릴 식구는 많았다. 악착같이 번 돈은 제이콥의 가족에게로 흘러갔다. 하지만 힘들었던 부양도 비로소 끝이 나고 마침내 ‘우리’의 안정만 생각해도 될 때가 왔다. 그런데 제이콥이 똥판지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빅 가든’을 만들겠다고. 평생 병아리 똥구멍만 보며 살아갈 수는 없다고.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 삶을 일궈나가는 것이 목표였던 둘 사이에 갑자기 제이콥의 욕망이 불쑥 고개를 들이민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청천벽력에 제이콥에 대한 믿음이 금가는 순간이었을 테다.

미나리의 생명력은 순자에서 모니카에게

그러나 모니카는 속을 드러내지 않는다. 서로를 몰아붙이던 부부싸움이 있던 날 밤 이후로 한발 양보한 듯한 그는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다. 제이콥이 값비싼 농기계를 구매하거나 가정용 수도를 농사짓는 데 끌어다 써 물이 끓졌을 때도 별다른 말을 보태지 않는다. 다만, “저이는 내가

모르는 줄 알아”라는 한숨 섞인 말 뒤엔 굳은 결심이 따라 붙는다. “엄마, 우리 가족은 내가 먹여 살릴게.”

병원에서 데이빗의 심장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모니카는 마지막으로 제이콥에게 말한다. 함께 도시로 가자고. 당신 없이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는 모니카의 애절한 부탁에도 끝내 농장을 택한다. “당신은 그냥 가서 하고 싶은 거 해.” 제이콥의 말에 모니카는 얼어붙은 표정이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속 편한 말 아닌가. 정작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은 본인이면서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라니. 저 깊은 곳에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끓어올라 당장이라도 입을 뚫고 나올 것 같지만 모니카는 눌러 삼킨다. 가족과 함께인 것보다 자신이 시작한 일의 끝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모니카는 그때 결심했을 것이다. 이 사람과는 정말 끝이라고.

그렇게 몇 번의 무너짐 끝에 모니카는 갈라섬을 결정한 다. 그러나 곧 크나큰 사건이 벌어지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된다. 순자가 심어놓은 미나리는 어느새 무성하게 자라 있고, 그 굳센 생명력을 기반으로 밭과 삶을 일궈 나갈 것임을 암시하며 영화는 끝난다. 그들이 그려나갈 미래를 상상하며 모니카의 단단한 심지를 생각해본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자리에서 할 일을 하던,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남편을 설득해보려 했던 그 강건한 태도는 어쩐지 미나리의 생명력을 닮은 듯하다. 모질고 척박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조용히 뿌리 내려 터전을 잡는 것. 그래서 ‘미나리’는 이 가족의 삶을 가리키는 동시에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모니카의 강단 또한 의미할 수 있지 않을까. 미나리 씨를 갖고 온 이가 순자라는 것을 떠올리며, 모니카의 뚝심이 어디서부터 이어져 왔는지를 되새겨본다. ♡

기술에 기술을 더한 혁신에너지,
깨끗한 미래를 약속합니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안전한 원자력기술로
내일을 연구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제도개혁에 앞장선 현장 정치인

권익향상 위한 법 마련에 적극 참여



주양자

제14-15대 국회의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우리나라는 'K-방역'으로 해외의 주목을 받았다. 정부의 방역활동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료진단과 치료, 공공병원의 환자치료와 같은 촘촘한 공공 의료체계가 힘을 발휘한 덕분이다. K-방역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노력이 힘이 됐다. 여성 최초로 국립의료원장, 의료보험공단이사장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주양자 전 국회의원의 활동도 그 속에 있다.

의사 경험 바탕으로 제도개혁 실천한 정치인

의사 출신으로 14-15대 국회의원을 지낸 주양자에게 정치는 제도개혁이었다. 14대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이나 '시체 해부 보전법 개정법률안' 등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개혁을 일궈낸 대표적인 사례다.

주양자는 고려대 의대 재학시절 6·25를 겪었다. 전쟁은 남녀노소, 빈부를 가리지 않고 생명을 위협했다. 처절하게 전쟁을 경험한 주양자는 졸업 후 국립의료원 전공의 과정을 택했다. 국립의료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 재난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이다. 이곳에서 1971년 대연각 호텔 화재 사건을 만났다. 의료부장이었던 주양자는 병원에서 전담 의료팀과 날밤을 새우며 환자를 지켰다. 1983년 미안마(버마) 아웅산묘소 폭탄테러 사건 때도 10여 명의 부상자를 치료하는 일선에 있었다. 대형사건 때마다 주양자는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이 있어야 함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주양자는 1987년 국립의료원장으로 취임한다. 여성으로는 최초였다. 화려한 최초 타이틀이었지만 남성들보다 배 이상 긴 9년의 의료부장을 마친 뒤에야 찾아온 기회였다. 국가 의료기관에도 여성 최고책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고액 연봉을 앞세운 스카우트 제의를 마다하고 꺾듯 버텨낸 결과이기도 했다.

국립의료원장에 이어 1990년 여성 최초로 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에 발탁,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틀을 다졌다. 국립의료원 의료부장 시절부터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관련 단체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안 해결에 앞장섰던 것이 도움이 됐다.

1992년, 제14대 민주자유당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정치인이 된다. 국회의원 주양자 앞에는 급변하는 의료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규를 제·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었다. 주양자가 가장 주력한 분야는 응급의료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른 대한민국은



함영이

• 작가
• 우먼타임스 편집국장(전)

대내외로부터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다. 응급환자가 이송 중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인명구조단이 운영되는 등 법규는 없고 관련 지침과 규칙은 분산되거나 혼재돼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1993년 부산 구포 열차 전복사고에 이어 목포 인근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현장은 후유증을 남겼다.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주양자는 대한응급의학회, 주요대학병원,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대대적인 작업을 시작했다. 의원입법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때라 법률안 작업은 의원실에서 전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검증에 검증은 거친 끝에 1993년 1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 그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제정된 지 30년이 넘는 ‘시체해부 보존법 개정 법률안’의 전부개정법률안도 주양자의 손을 거쳐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행려 사망인에 대한 규정도 정리했다.

문제 있는 정책에는 소신으로 대처

보건의료정책과 의료보험정책의 개선에도 목소리를 냈다. 당시 의료보험법은 2개월 이상 의료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급여를 제한하고 보험료 미납 확인 의무는 의료기관에 떠넘겼다. 심지어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의 의료기관이 진료했을 경우,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국회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관련 민원이 쏟아졌다. 주양자는 상임위원회 정책질의부터 의원청원까지 끈질기게 문제를 짚어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1994년 국정감사에서는 수입 혈액에 대한 검사의 정확도 문제를 짚어 정부의 수입혈장 정책에 경각심을 일으켰다.

주양자는 여성문제도 지나치지 않았다. 여성 최초였지만 남성들보다 늦게 국립의료원장을 단 주양자에게



차별 문제는 절실했다. ‘여성발전 기본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중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선영과 공동으로 ‘성폭력 예방 및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1994년 6월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강선영 등 여성 의원과 주도하고 1995년 10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여성정책 연구포럼 창립에도 앞장섰다. 1996년 자유민주연합(자민련)으로 옮긴 주양자는 당에서 여성 담당 사무부총장과 여성 실장 등을 맡아 정당 내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일에도 앞장섰다.

1998년 3월 제35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주양자는 부동산문제 2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2000년 2월 지대섭 의원의 탈당으로 의원직을 승계, 15대 국회 후반부에도 짧게 의원활동을 수행했다. 15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후 야인으로서의 여유를 누리던 주양자는 2006년 경기도립의료원장으로 다시 환자들과 만났다. 의료봉사에 관심이 높았던 주양자는 경기도 내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무료 진료실을 열고 봉사활동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의사로서 공직자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묵묵하게 의료계의 발전과 제도개혁에 앞장선 주양자는 2010년 한국여자의사회와 한독약품이 공동으로 선정하는 제1회 한독 여의사지도자상을 수상한데 이어 2020년 ‘무록 남경애 빛나는 여의사상’의 첫 수상자로 선정됐다. 90대에 접어든 선배의 역할을 후배들은 잊지 않고 있다. 🍎

보편적이고 특이한 내 어머니의 길



이응호
양금희 국회의원 아들

흑백 사진 속의 '선생님' 시절

어머니가 교편을 잡던 시절의 모습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다. 둘째인 내가 태어나며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다고 하니, 당연한 일이다. 몇 년 전, 창고를 정리하다가 나온 과거 사진을 모아 놓았을 때 흑백 사진 속의 모습으로 접한 것이 전부이다.

다만 사진 속의 모습을 보며 들었던 생각은, '사진 속 어머니는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밝은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의 직장 생활은 요즘 어떠한가 반성하며, 언젠가는 어머니가 자신이 원하는 일을 다시 찾아서 하기를 바라게 되었다.

행동으로 가르친 '응현과 응호 맘'

내가 기억하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의 절반 이상은, 인간 '양금희'가 아닌 형과 나의 '응현, 응호 맘'으로 불리던 때다. 이 시절의 어머니께서는 말 그대로, '어머니'의 역할에 정말 충실했다. 아들의 학업과 진로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형과 내가 장래에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어떻게 보면, 마냥 '치맛바람'이 강한 사람으로 보였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머니는 내게 그 이상을 보여주고, 또 느끼게 했다. 나는 학창 시절 말썽을 많이 부렸고, 특히 성인이 된 후에는 학업과 진로 문제로 가출까지 했던 부끄러운 경험이 있다. 가출하여 당장 하루하루 먹고사는 문제를 아르바이트로 해결해나가기 바쁜 시간이었지만, 그 기간이 어머니에게는 아마도 너무나도 큰 상처로 남았을 것이라 짐작한다.

가출 기간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경찰을 통해 결국 나를 찾았고, 그때 집에 들어가면 정말 혼이 많이 날 줄 알았다. 그러나 그날 어머니는 질책의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밥은 먹었는지 물어보며 집에 가자고, 짧게 말했다. 그 이후도 그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았다. 십 수 마디의 말보다, 어머니가 보여준 이해와 포용의 행동은 그날 이후로 내게 아주 큰 가르침이요 마음의 빛으로 남았다.



양금희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대구북구갑)

시민 단체장으로 사회생활 다시 시작

형과 내가 모두 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진로에 대한 걱정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즈음, 어머니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여성 정치 참여에 대한 시민 활동을 시작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복귀 시스템의 지원이 아직 부족하고, 중년 이후 전업주부로 생활하던 여성의 사회 활동이 결코 쉽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또 실행한 점에 대해서 나는 참으로 존중하고 지지해드리고자 했다.

아주 작은, 5명가량의 소모임을 운영하는 것도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하물며 전국 단위의 조직을 갖춘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을 이끄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지, 아직 사회 초년생에 가까운 나는 알기 어렵다. 내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아마도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과정을 이겨내고 쌓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내공이, 현재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리라 믿는다.

운동으로 체력 키우며 강행군하는 국회의원

의원 활동을 시작한 후 어머니는, 늘 그렇듯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한다. 특히, 본인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요즘 들어 더욱 자주 보게 되었다. 나는 대학을 다니고 있던 시절 국회의원실에서 인턴십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하루에 소화하는 일정과 업무량이 외부에서 느끼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많다고 느꼈다. 때문에 평소 체력이 약해 1년 365일이 강행군인 국회에서의 활동을 잘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었는데 이러한 점을 어머니도 잘 알고 있어 체력을 늘리기 위한 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아들로서 배워야 할 점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고 느낀다.

내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삶의 궤적은, 어찌 보면 보편



적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특이하다고도 볼만하다. 선생님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이후 보편적인 한 가정의 '어머니'로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낸 후, 이후에 다시 인간 '양금희'로 돌아와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폭넓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삶이, 결코 이 사회에서 특이한 것으로 남지 않았으면 한다. 이 사회가, 개개인에게 모두 평등한 자아실현과 함께 가정에도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었으면 한다. 평생 이러한 문제를 몸소 겪은 어머니인 만큼, 이 어렵고 중대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어머니께서 얼마나 더 오래 '국회의원' 양금희로 있을지는 모른다. 다만 바라건대, 국회의원 양금희로서의 역할이 끝나는 그 날에는, 이 글이 실릴 '여성의정'이 필요 없어지는 때가 되었으면 한다. 한 개인이 성별, 종교, 정치관, 인종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고 각자 인간으로서의 자아실현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다가오기를 바란다.

그때까지 어머니, 화이팅! 🍀

어
떻
게
지
내
세
요
?

국제 변호사 본업으로 귀의 아직도 '개미'처럼 일해

서혜석 제17대 국회의원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에서 과기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열린우리당의 대변인으로도 활약한 바 있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인 1980년대 캘리포니아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세계 최대 로펌인 베이커 앤 맥킨지에서 근무하였으며, 1990년도에 귀국하여 국내 로펌에서 재직하였다. 2004년 열린우리당의 국제통상 분야 전문가로 비례대표로서 국회에 등원하였다.

2008년 국회 임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국제업무팀의 상임고문으로 관련 실무를 하고 있다. 국제상사 중재나 본인의 전문성이 꼭 필요한 분야를 제외한 정부나 공공 부문에서의 활동을 가급적 줄이고, 국내외 민간 기업 간 계약, M&A, 투자 등 국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아직도 '개미'처럼 일한다고 근황을 전한다. 유럽, 미주, 중국 등 전세계의 고객들과 한밤중 원격회의도 자주 치르는데 몸이 옛날 같지 않다는 푸념도 덧붙인다. 조만간 실무에서 은퇴하여 집에서 운동하면서 한가로이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게 소박한 목표라고 한다. 그래도 회사의 총명한 젊은 국제 변호사들을 지도하고, 살아 있는 실전 교육을 통해서 국내외에서 수십 년간 쌓아 온 노하우와 경험을 승계시키는 것이 보람이라고 한다.

정치하고는 아무런 인연과 자질이 전혀 없던 보통 사람이 국회에서 국사에 참여하기도 했고, 또 '역사의 수레바퀴'에 치일 뻔한 색다른 경험을 통해 인생의 해안을 조금이나마 높게 되어 크나큰 축복으로 여긴다. '팔자에 없는' 의원 생활에서 알게 된 정치계 선후배에게서 큰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 또한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바쁜 생활 속에서 잊고 있던 분들에게서 안부 연락이 오면 참으로 반갑단다.



여성운동 마지막 봉사 여성인력개발센터 회장 맡아

이계경 제17대 국회의원



이계경 의원(한나라당)은 요즘 <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이란 단체의 회장을 맡아 지난 2년간 일을 했고, 올 2월에 다시 연임을 했다. 우리나라에는 여성의 취업을 위한 교육과 상담, 일자리 알선도 하는 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전국에 53개 있다. 시작된 지 27년 되었고, 여성가족부 산하지만 지자체가 운영 관리한다. 매년 20만 명 이상의 교육생이 배출되고 취업률도 상당히 높아 여성 취업 지원 기관으로는 가장 신뢰할 만한 기관이다.

그가 회장이 된 후 답답한 것은 아무리 취업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지원해도 현재 여성 취업률은 60%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지표는 90년대의 수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직종에 종사해도 월급은 남성의 60~70% 밖에 못 받는 게 현실이다. 여성운동이 발전하고 여성 국회의원도 15%를 넘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의 벽은 두꺼울 뿐이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진행은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 과제를 개선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보수도 없는 봉사자이지만 후배들을 위해 기꺼이 맡아 활동하고 있다.

올 2월에는 각 지자체를 평가하여 <여성 경제활동 촉진 대상>을 시상한 바 있다. 17개 광역 단체 중 전라남도가 대상, 강원도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기초단체는 여수, 전주, 인천 서구가 수상하였다.

국회의원 시절 더 많은 법안을 발의해서 여성들의 일자리 확립을 세우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현역 의원과의 긴밀한 협조로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법안 통과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평생 여성운동을 해 온 나의 마지막 봉사 과제는 여성의 경제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나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과 같아지고 동일임금, 동일노동이 실현될지 아속하기만 하다.” 고 한다.

경기도 민관협치위원 도민의 주민참여 정책 지원

최순영 제17대 국회의원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여성 노동자로서 여성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70년대부터 여성 노동자 운동을 해 오던 중, 1991년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때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활발한 조례제정 운동을 벌여, 전국 최초로 청소년을 위한 담배 자판기 철거를 위한 조례제정과 학교급식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이끌었다.

2004년 제17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국회에서는 교육위원, 여성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 등을 위한 활동을 했다.

국회 활동을 마친 후에는 부천시 무상급식 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을 맡아 학교 급식을 친환경 급식으로 전환하는 운동을 벌였다. 2016년 경기도 교육청 시민감사관 대표로 역임하며, 사립유치원 감사를 통한 비리 적발 및 공론화를 통해 유치원 삼법 제정까지 이끌었다. 최근에는 경기도청 민관협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다. 민관협치위원회는 도민이 함께하는 도정을 기조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고, 매년마다 경기도민의 정책 제안을 받고 활발한 토론을 하는 정책축제를 개최한다.

여성단체 활동으로서는 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연합, 자주여성연대, 경기여성연대 등 네 개의 여성단체와 경기도의회 여성위원이 함께 정책 네트워크를 이루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기지촌 여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했다. 또 부천지역에서 부천 YWCA 회장, 여성노동자회 이사, 부천햇빛발전소 이사장으로도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이다. 



한국여성의정은

2013년 설립된 국회의장 산하 법인으로서, 제헌 국회 이후부터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들이 모여 여성의 정치발전과 건강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여·아를 초월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방문해 건의사항 전달

2020년 1월 26일 한국여성의정의 신명 상임대표와 김혜성 사무총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방문하였다. 새해 인사와 담소를 나누며 2021년 여성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 자리에서 「선출직 남녀동등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지원과 제10차 헌법 개정 관련하여 헌법 제1조3항 신설에 관한 건의 사항을 전하기도 하였다.



제1차 장학위원회와 재학생 학업 평가

한국여성의정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학과 협력하여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1-4기 장학생에 대한 학업성과 평가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19명,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23명에 대하여 코로나19의 거리두기로 서면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장학위원회(위원장 신낙균)는 지난 4월 12일, 법인회의실에서 여성 의정 장학생 지원자격 확대의 건, 장학금 정산 등을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5기 신입생 OT와 1기 졸업생 세미나

3월 5일,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5기 신입생 OT와 1기 졸업생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세미나에는 여성의정 장학생이자 1기 졸업생인 지역 의원의 졸업 논문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성실히 학업에 임하고 자신의 연구성과까지 제출한 1기 졸업생 모두 축하드린다.





여성의정 정치학교 교보재 출판

한국여성의정에서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비정치인 교육을 위해 여성의정 정치학교 기본교재 『정치! 이것부터다』와 전문교재 『출발! 함께 합시다』를 출판하였다.

기본교재 『정치! 이것부터다』는 예비정치인에게 필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여성의정 정치학교 기본과정의 교보재로, 정치를 꿈꾸는 여러 예비정치인과 도전의 첫걸음을 함께 하게 된다. 전문교재 『출발! 함께 합시다』는 선거를 준비하는 여성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효과적으로 자신을 알리는 선거 전략을 수립하고 홍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정치 선배의 사례와 함께 담은 책이다.



2021년 제1차 이사회, '여성의정 비전 25' 수립

2월 18일 2021년도 제1차 이사회가 열렸다. 코로나19로 서면결의와 영상회의(국회의원회관 영상실)로 진행했으며, 참석 6명, 서면결의 3명, 위임 21명으로 성원을 채웠다.

2021년 1분기 주요사업 운영사항 등 5건의 보고안건과 「여성의정 비전 25」(안) 수립에 관한 건 등 4건의 심의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국여성의정의 향후 5년간의 중기종합계획인 「여성의정 비전 25」(안)을 수립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는 회의였다. 처음으로 영상으로 진행된 회의에 접속 절차 미숙으로 참석률이 저조하여 차후 회원 교육을 통해 원활한 진행으로 참여율을 높이는 의견이 있었다.



4·7보궐선거 평가와 6·1 선거 대책 토론회

한국여성의정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4·7보궐선거가 끝난 직후, 4월 15일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2022 남녀동수를 향하여'를 주제로 4·7보궐선거 평가와 6·1 선거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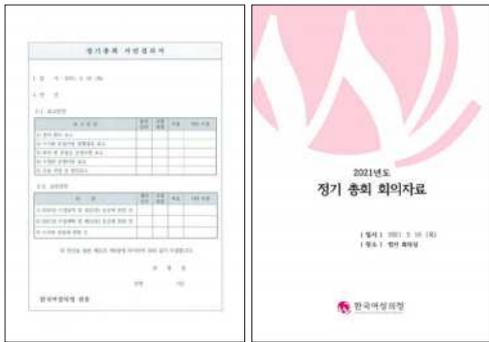
좌장은 유승희 전 국회의원, 발제는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박명호 동국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지정토론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 외 국회와 정당, 여성단체, 지방의회, 학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10명이 참여하였다. 코로나19의 거리두기로 제한된 인원이 참석하였지만, 여성 정치참여 확대와 남녀동수 실현을 위한 정당과 여성계의 과제, 여성정치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활발한 의견과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다.





2021년 정기 총회 개최

3월 18일 2021년도 정기 총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 총회는 대면 회의를 서면결의로 대신하였으며 52명 서면결의, 60명 위임장 제출, 57명이 불참하였다. 서면결의였음에도 적극적인 참여로 5건의 보고안건과 202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승인,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관한 건 등 3건의 심의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총회 결과보고는 회원들에게 이메일과 문자로 통보하였으며, 한국여성의정의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다.



제3회 여성정치인 어울모임 준비 회의

한국여성의정은 2022년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녀동수 실현을 위한 여성정치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지방정치 후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3회 여성정치인 어울모임을 계획하고 있다. 여성정치인의 목소리를 전하고 다수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울모임 준비를 위하여 지난 5월 3일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심상정), 5월 4일 실무위원회(실무위원장 김혜성) 회의를 개최하였다.



여성의정 정치학교 교장협의회

2021년 여성의정 정치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4일 법인회의실에서 정치학교 간의 협력과 소통을 위하여 지역 정치학교 교장으로 구성된 교장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교장협의회에서는 교장협의회 회장(유승희 전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지역 운영위원회 구성과 사업비 집행 등 2021년 정치학교 운영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후 3월 31일 지역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과 간사가 모여 2021년 지역 정치학교 운영 지침과 사업비 집행에 대한 유의사항,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여성의정인물사 시리즈

『세상을 바꾼 여성정치인들 ④ : 정착기편』 발간

한국여성정책에서는 지난 2019년 여성의정인물사시리즈 제3호에 이어, 『세상을 바꾼 여성정치인들 ④ : 정착기편』을 발간하였다. 이번 여성의정인물사 제4호에서는 총 19명의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다루었는데, 특히 제16대 국회의원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였다. 제16대 국회에서는 여성을 위한 제도가 확립되었던 시기다. 이 시리즈를 통해 현실 정치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왔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하나의 롤모델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1년 여성의정 정치학교 기본과정 교육 개시

한국여성정책은 차세대 여성정치인 발굴과 역량강화를 위한 충청정치학교 충남아카데미(4.10-5.1)를 시작으로 2021년 여성의정 정치학교 기본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정치학교(5.15-6.12), 서울정치학교(5.22-6.19), 호남정치학교 전남아카데미(5.29-6.26), 인천정치학교(6.5-6.22)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정책
여성의정
경기정치학교 기본과정기
2021.05.15~06.12
매주(토) 5회 이용센터

교육대상: 본회의 의정활동, 입법활동, 정책활동 등에 관심 있는 의정활동가
교육 목적: 의정활동가들의 정치역량 강화
교육장소: 경기여성정책지원센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100-1)

일시	시간	주제	강사
5/15 (토)	13:00-13:30	개회식	한국여성정책위원회장
	13:30-13:45	선배의원 이야기	박정현의원
5/16 (토)	13:00-13:30	세상바꾼 여성정치인들	박정현의원
	13:30-13:45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5/17 (토)	13:00-13:3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13:30-13:45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5/18 (토)	13:00-13:3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13:30-13:45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5/19 (토)	13:00-13:3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13:30-13:45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5/20 (토)	13:00-13:3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13:30-13:45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5/21 (토)	13:00-13:3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13:30-13:45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5/22 (토)	13:00-13:3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13:30-13:45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문의/참가신청: 경기 사무국 010-2208-8068

한국여성정책
서울정치학교
2021.5.22-6.19,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서울여성정책지원센터 3층 교육실
교육대상: 본회의 의정활동, 입법활동, 정책활동 등에 관심 있는 의정활동가
교육 목적: 의정활동가들의 정치역량 강화
교육장소: 서울여성정책지원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로 100-1)

일시	시간	주제	강사
5/22 (토)	10:00-10:30	개회식	한국여성정책위원회장
	10:30-11:0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5/23 (토)	10:00-10:3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10:30-11:0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5/24 (토)	10:00-10:3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10:30-11:0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5/25 (토)	10:00-10:3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10:30-11:0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5/26 (토)	10:00-10:3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10:30-11:0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5/27 (토)	10:00-10:3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10:30-11:0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5/28 (토)	10:00-10:3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10:30-11:0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5/29 (토)	10:00-10:3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10:30-11:0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5/30 (토)	10:00-10:3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10:30-11:0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5/31 (토)	10:00-10:3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10:30-11:0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한국여성정책
인천정치학교
강의 프로그램

날짜	시간	주제	강사
5/29 (토)	10:00-10:30	개회식	한국여성정책위원회장
	10:30-11:0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5/30 (토)	10:00-10:3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10:30-11:0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5/31 (토)	10:00-10:3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10:30-11:0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6/1 (토)	10:00-10:3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10:30-11:0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6/2 (토)	10:00-10:3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10:30-11:0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6/3 (토)	10:00-10:3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10:30-11:0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6/4 (토)	10:00-10:3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10:30-11:0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6/5 (토)	10:00-10:3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10:30-11:00	의정활동의 중요성	김영희의원

문의/참가신청: 인천사무국 010-2208-8068



정치학교개선위원회 회의

지난 5월 6일, 법인회의실에서 정치학교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치학교개선위원회(위원장 이해훈)를 개최하였다. 먼저 여성의정 정치학교 개요, 2021년 지역 정치학교 운영현황 등을 보고하고,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정치학교의 전문 강사진 구성, 한국여성의정 회원의 인적자원 활용과 관리 등을 위한 전임교수의 건, 전문과정 및 현장과정의 교육실시 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눴다.



<회원동정>

도영심 전 국회의원 세계여행관광협회 홍보대사에 임명



도영심 의원
(제13대)

도영심(제13대 국회의원) 전 유엔 세계관광기구 스텝(ST-EP) 재단 이사장이 지난 4월 26일 세계여행관광협회(World Travel&Tourism Council, W TTC)의 홍보대사에 임명됐다. 도영심 전 의원은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문화예술관광대학원 문화관광코스를 수료하였고 국제적 인맥을 갖춘 문화예술관광계의 전문가이다.

W TTC는 올해 관광 일자리가 최소 8,200만 개에서 최대 1억 1,100만 개까지 되살아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여행관광업계가 대폭 위축되기는 했지만 올해 백신 접종의 시작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여행이 재개되면서 여행관광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가 좀처럼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경계를 하며 자체적으로 관광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여행 복원에 전반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세계여행관광업계가 위기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나아가는 중요한 길목에 있는 가운데, 홍보대사로서 임명된 도영심 전 의원이 세계여행관광업의 회복을 위해 그의 전문 역량을 펼쳐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호 전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윤원호 의원
(제17대)

윤원호 의원(전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이 6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여성의 나이들’을 생각하다』의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 책에는 선배세대가 일구어온 여성의 역사를 돌아보고 후배세대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여성의 역사를 세우고자 하는 그의 생각이 담겨있다. 부산여성신문 창간22주년 기념 세미나를 겸한 이번 출판기념회에서는 ‘고령화 시대 여성의 나이들에 관한 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여성정치인 육성과 여성 정책 연구에 힘써 온 윤 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별·연령을 초월하여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정부는

환경부·여성가족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 장관 취임



한정애 환경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지난 2020년 12월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취임하였다.

한정애 장관은 3선 의원(19-21대)으로, 환경공학을 전공한 환경전문가이다. 19-20대 국회의원 역임 당시 환경노동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한정애 장관은 취임사에서 탄소중립 미래를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등 그린뉴딜 핵심과제에서 반드시 성과를 낼 것과, 온 국민과 함께 탈 플라스틱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 등의 포부를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같은 시기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임하였다.

정영애 장관은 여성학 1호 박사로, 한국여성학회 회장, 한국여성재단 이사 등으로 활동해왔다. 취임사에서 그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과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청소년이 존중받는 사회, 함께하는 포용사회를 이루어 가겠다고 하였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5월에 취임한 임혜숙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초 여성 장관으로, 취임사에서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ICT의 혁신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우리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지방은

4·7 보궐선거에서 5명의 여성의원 당선

◎광역의회

전남



한춘욱(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의원

◎기초의회

서울



차인영(국민의힘)
서울 영등포구 의원

서울



김순애(국민의힘)
서울 송파구 의원

경기도



박수연(국민의힘)
파주시 의원

전남



조영남(더불어민주당)
보성군 의원



한국여성의정

Korea Women Parliamentarian Network

세상을 바꾸는 정치, 정치를 바꾸는 여성



여성의정 정치학교



기본 과정

전국 8개 지역

전문 과정

기본과정 수료자

현장 과정

전문과정 수료자

교육 대상자 및 인원

전·현직 지방의원
시민활동가
정치참여에 관심 많은 청년여성

문의

02-786-5050

2020~2021년 전반기

여성 국회의원 의결 법안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의결일을 기준으로 제21대 여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의원 28명의 67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법안은 아동·청소년, 교육, 주거, 의료, 고용·노동, 여성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이다. 임오경 의원과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처리된 건이 각각 11건과 9건의 총 20건으로, 의결된 법안 수의 약 1/3을 차지하였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등 10인)
의결일자 2021-02-26 | 대안반영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등 11인)
의결일자 2021-03-10 | 철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등 11인)
의결일자 2021-03-12 | 철회



김예지 국민의힘, 비례대표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의결일자 2021-02-26 | 대안반영폐기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의결일자 2021-03-24 | 대안반영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의결일자 2021-02-08 | 철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5인)
의결일자 2021.01.29 | 철회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6인)
의결일자 2021.01.29 | 철회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1인)
의결일자 2021-03-24 | 대안반영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5인)
의결일자 2021-03-24 | 대안반영폐기



강은미 정의당, 비례대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0인)
의결일자 2020-12-09 | 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3인)
의결일자 2021-03-24 | 대안반영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3인)
의결일자 2021-03-24 | 대안반영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0인)
의결일자 2021-01-15 | 철회



김정재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북구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2인)
의결일자 2021-03-24 | 대안반영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의결일자 2021-01-08 | 대안반영폐기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0인)
의결일자 2021-03-24 | 대안반영폐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의결일자 2021-02-26 수정가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의결일자 2021-03-24 대안반영폐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의결일자 2020-12-09 | 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의결일자 2021-03-24 | 원안가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의결일자 2021-03-24 | 대안반영폐기
- 지역사회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



서정숙 국민의힘, 비례대표

- 의로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등 10인)
의결일자 2021-02-26 | 대안반영폐기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의결일자 2020-03-24 | 대안반영폐기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20인)
의결일자 2021-02-26 | 대안반영폐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8인)
의결일자 2021-02-26 | 수정가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1인)
의결일자 2021-02-26 | 대안반영폐기



심상정 정의당, 경기 고양시갑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2인)
의결일자 2020-12-18 | 철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1인)
의결일자 2021-03-24 | 대안반영폐기



양금희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1인)
의결일자 2021-03-24 | 대안반영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0인)
의결일자 2021-03-24 | 대안반영폐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 등 15인)
의결일자 2021-03-24 | 대안반영폐기



윤주경 국민의힘, 비례대표

- 6·25 전자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등 10인)
의결일자 2021-03-24 | 대안반영폐기



이수진(지) 더불어민주당, 동작구을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의원 등 12인)
의결일자 2021-02-26 | 대안반영폐기
-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의원 등 13인)
의결일자 2021-03-24 | 수정가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의원 등 27인)
의결일자 2021-03-24 | 원안가결



이수진(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의원 등 16인)
의결일자 2021-03-24 | 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의원 등 12인)
의결일자 2021-03-24 | 대안반영폐기



장혜영 정의당, 비례대표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장혜영의원 등 10인)
의결일자 2021-03-24 | 대안반영폐기



전주혜 국민의힘, 비례대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등 12인)
의결일자 2021-02-26 | 철회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의결일자 2020-12-17 | 철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의결일자 2020-12-17 | 철회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의결일자 2020-12-17 | 철회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의결일자 2020-12-17 | 철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의결일자 2020-12-17 | 철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의결일자 2020-12-17 | 철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의결일자 2020-12-17 | 철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의결일자 2020-12-17 | 철회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의결일자 2020-12-17 | 철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9인)
의결일자 2021-03-24 | 수정가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의결일자 2021-03-24 | 대안반영폐기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2인)
의결일자 2021-03-24 | 대안반영폐기



조명희 국민의힘, 비례대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34인)
의결일자 2021-02-26 | 대안반영폐기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의결일자 2021-03-24 | 수정가결



임이자 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의원 등 11인)
의결일자 2021-03-24 | 대안반영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의원 등 10인)
의결일자 2021-03-24 | 대안반영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의원 등 10인)
의결일자 2021-03-24 | 대안반영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의원 등 10인)
의결일자 2021-03-24 | 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의원 등 12인)
의결일자 2020-12-09 | 대안반영폐기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임이자의의원 등 10인)
의결일자 2021-01-08 | 대안반영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의원 등 10인)
의결일자 2021-03-24 | 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의원 등 12인)
의결일자 2021-03-24 | 대안반영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의원 등 12인)
의결일자 2021-03-24 | 대안반영폐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한정애의원 등 138인)
의결일자 2021-02-26 | 대안반영폐기



허은아 국민의힘, 비례대표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의원 등 10인)
의결일자 2021-03-24 | 수정가결



황보승희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의결일자 2021-02-26 | 대안반영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23인)
의결일자 2021-03-24 | 폐기

Vol.12 2021

편집후기

최근 가장 핫한 표현이 '이여자(이대녀)'와 '이남자(이대남)'입니다. 20대 여자와 남자를 칭하는 줄임말인, 이 말은 품은 뜻이 흥미롭습니다. 이남자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분노, 이여자는 그 불공정과 불평등이 여성에게 더욱 심하다는 성차별에 대한 분노를 가진 세대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분석이 옳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집단과 조직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각기 달리 이 단어를 해석하여, 싸우고 혈투고 곡해합니다. 이 두 단어의 실체와 해석의 차이가 보여주는 동상이몽이 우리 여성정치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제대로 이해 못 하는 불소통, 혹은 이해관계에 따라 결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

『여성의정』 12호는 지난 4·7 보궐선거의 결과를 되새기고 내년에 있을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하는 '2022 여성 정치'를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토론과 좌담의 열기 넘치는 현장에서도 이여자와 이남자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 화두였습니다. 외부로부터 던져진 이 화두는, 결국 페미니즘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대접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여자와 이남자가 분노하는 출발점과 그 해결법은 하나라는, 결코 반목하고 대립하지 않는다는 진정한 여성 정치를 위한 고민과 성찰이 이번 『여성의정』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또,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여성의정 구독/안/내

(사)한국여성의정은 2013년 설립된 국회의장 산하 법인으로
 제헌 국회 이후부터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들이 모여 여성의 정치발전과
 건강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여성 정치인의 의정활동을 공유하고, 여성 정치인의
 교육 및 네트워크의 장으로 매년 3회 『여성의정』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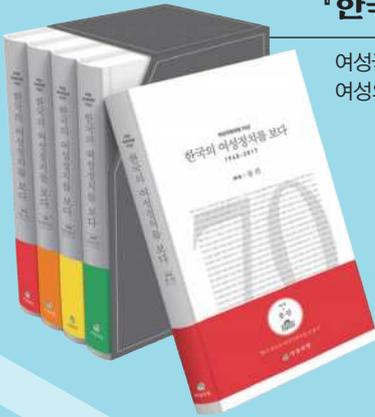
- 기관지명** 『여성의정』
- 발행** 연 3회
정기 2회: 5월, 12월 / 특집 1회: 8월
- 정기구독료** 연 20,000원(7,000원/권)
입금계좌: 농협 301-0225-7334-11(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정)
- 보내실 곳** kwpn2013@daum.net / Fax) 02-784-0717
문의: 사업팀장 김단비(02-786-5050)

※납부관련 서류(계산서 발행 등)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신청 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정에서 펴낸 책들

『한국의 여성정치를 보다』

여성국회의원 70년, 1948-2017
여성의정 | 총 4권 | 180,000원



『제20대 국회, 한국의 여성정치를 보다』

제20대 여성 국회의원, 2016-2020
여성의정 | 총 2권 | 100,000원



『세상을 바꾼 여성정치인들』

여성의정인물사 시리즈 1-4권
여성 국회의원의 역동적인 삶을 기록
여성의정 | 총 4권 | 각 25,000원



『여성의정』

한국여성의정 기관지
여성의정 | 총 12편 |
각 7,000원



여성의정 정치학교 교재

『알아두면 쓸모있는 새로운 선거이야기』
『정치! 이것부터다』
『출발! 함께합니다.』
여성의정 | 총 3권 | 각 10,000원



『젠더 입법』

성인지 의회를 위한
젠더 입법 가이드 북
여성의정 | 총 2권 |
10,000원



 **한국여성의정**
Korea Women Parliamentarian Network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942호
전화: 02)786-5050(남여동수상징)
홈페이지: www.kwpn.co.kr